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체계 개선방안

— FTA 체결(예정)대상 주요 국가별, 부적합 현황 중심으로 —

2007. 10. 22

국회의원 안 명 옥

●● 머 리 말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체계 개선방안

‘갈비탕 재료’, ‘진쌀’ 등 중국산 식재료의 위해성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국민들의 식(食)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그 어느 때보다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은 중국산 위해식품들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수입식품과 관련한 자국민의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느라 경황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내생산 식품에 의한 자급자족에는 한계가 있어 수입 농수축산물, 식품원료, 가공식품, 포장용기류 등을 비롯한 먹거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최근 자유무역 원리에 근거한 시장개방 압력 등 자의반 타의 반 국민 먹거리의 수입경향은 확대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할 때 수입식품 안전관리 대책이야말로 국민건강 보호 차원의 국가정책의 핵심과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외에 의존하는 국민 먹거리 안전대책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거리 수입단계에서의 검역 및 통관, 국내유통 과정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반 장치들은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못하고, 인력과 장비는 턱 없이 부족하며, 탁상공론식 관행에 젖어 문제해결을 위한 현장대응 능력도 모자란 형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품에 대한 행정과 법령이 무려 7개 부처로 분산되어 있어, 이로 인한 식품행정 업무의 부처 간 통일성, 책임성, 신속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식품안전관리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게 되면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는 상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효율적인 관리감독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급선무이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 차원의 기획 기능에 중점을 두어왔던 낡은 관행을 탈피하여 현장중심적이고 실질적 문제해결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한발 더 나아가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위해 식품을 우리 식탁에서 몰아내는 것이야말로 국민민복의 첩경이라는 인식이 정부와 국민들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야 할 것입니다.

본 자료집은 우리나라에 식품을 다량으로 수출하고 있거나 FTA 협상을 추진중인 국가들의 수입식품 실태와 검역 관련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그 대책을 담고 있습니다.

미흡하지만 본 자료집이 수입식품 안전관리 시스템을 정비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국가의 핵심정책을 수립해나가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0월

국회의원 **안 명 옥**

I. 국내 수입식품 검사 현황	1
1. 국내 수입식품 현황	3
2. 부적합 수입식품 검사 및 현황	7
3. 부적합 식품 국내 수입사례(자료보강)	13
II. FTA 체결(예정) 주요국가의 수입식품 부적합 현황	21
1. 중국산 수입식품 현황 및 문제점	23
2. 미국산 수입식품 현황 및 문제점	28
3. 일본산 수입식품 현황 및 문제점	33
4. 프랑스 수입식품 현황 및 문제점	38
III. 외국의 식품검역제도	45
1. 유럽연합의 수입식품 검사현황 및 체계	47
2. 미국의 수입식품 검사현황 및 체계	52
3. 캐나다의 수입식품 검사현황 및 체계	61
IV. 수입식품 검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71
1. 수입식품 검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73
2. 수입식품 검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85
V. 참고문헌	95
VI. 부 록	99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체계 개선방안

I

국내 수입식품 검사 현황

1. 국내 수입식품 현황

가. 수입식품 규모(건수 · 중량) 해마다 증가..

- 2003년부터 2007. 6월년까지의 수입식품 검사실적을 건수, 중량, 금액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면, 건수면에서는 2003년 대비 2006년에 28.8%포인트 증가하여 약 1.3배의 증가세를 보였음. 중량은 2003년 대비 2006년에 0.8%포인트, 금액은 34.6%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수입식품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 연도별 수입식품 검사실적 • •

단위: 건, Ton, 천USD, %

구 분	건 수		중 량		금 액	
	총 량	증감비	총 량	증감비	총 량	증감비
2003	185,142	-	11,134,999	-	5,802,233	-
2004	196,932	6.4	11,435,561	2.7	6,501,622	12.1
2005	215,363	16.3	11,259,592	1.1	7,583,759	30.7
2006	238,539	28.8	11,227,513	0.8	7,811,984	34.6
2007.6	134,036	-27.6	6,091,098	45.3	4,212,530	27.4

주 : 증감비는 2003년 기준으로 계산됨.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7, 안명옥의원 재정리

나. 품목별로 가공식품수입과 건강기능식품 증가세 두드러져..

- 가공식품의 검사실적 증가 추세가 다른 품목유형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즉, 2003년에 전체 수입량의 58.6%를 차지하던 가공식품은 2007

년 6월말에는 60.4%로 1.8%포인트의 증가추세를 보임. 반면에 농·임산물은 동 기간에 15.5%에서 14.9%로 0.6%포인트 감소추세를 보임.

• • 품목유형별 검사실적 • •

단위: 건, %

구분	합계	농임축수산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총량	점유비	총량	점유비	총량	점유비	총량	점유비	총량	점유비
2003	185,142	28,685	15.5	108,554	58.6	25,786	13.9	20,078	10.8	2,039	1.1
2004	196,932	32,179	16.3	110,738	56.2	27,606	14.0	20,252	10.3	6,157	3.1
2005	215,363	32,963	15.3	126,365	58.7	28,260	13.1	20,775	9.6	7,000	3.3
2006	238,539	35,643	15.0	141,474	59.3	30,038	12.6	24,161	10.1	7,223	3.0
2007.6	134,036	19,981	14.9	81,002	60.4	16,018	12.0	13,486	10.1	3,549	2.6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7, 안명옥의원 재정리

-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등 두 품목은 감소세를 나타냄. 특히 식품첨가물 감소세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짐. 건강기능식품은 2003년도에 전체 수입량의 1.1%를 차지했다가 2007년 6월말 현재 전체의 2.6%를 차지하는 등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모든 종류의 수입량이 증가하는 상황이지만 특히 건강기능식품의 증가추세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고 있음.

다. 중국 > 미국 > 일본 > 프랑스 순으로 식품수입 많아..

- 국가별 수입식품 현황을 비교하면, 2006년 이후 중국식품의 수입량이 우리나라 전체식품수입량의 30%를 넘었으며 그 뒤를 미국과 일본, 프랑스 등이 잇고 있음. 이들 국가들은 모두 한국과 FTA를 이미 체결했거나 협상을 준비하고 있는 국가들이어서 본격적인 대비책 마련이 시급함.

● ● 국가별 수입식품 현황(건수기준) ● ●

(단위: %)

순위	2003	2004	2005	2006	2007.6
1	중국 (22.5)	중국 (26.0)	중국 (29.7)	중국 (31.1)	중국 (30.0)
2	미국 (20.6)	미국 (19.6)	미국 (18.5)	미국 (17.7)	미국 (17.9)
3	일본 (15.7)	일본 (14.6)	일본 (13.9)	일본 (14.4)	일본 (14.6)
4	프랑스 (6.0)	프랑스 (5.8)	프랑스 (5.1)	프랑스 (4.8)	프랑스 (4.7)
5	독일 (3.5)	독일 (3.1)	독일 (2.8)	이탈리아 (2.8)	이탈리아 (2.9)
6	이탈리아 (2.8)	태국 (2.8)	태국 (2.7)	태국 (2.7)	태국 (2.7)
7	영국 (2.7)	이탈리아 (2.5)	이탈리아 (2.5)	독일 (2.5)	독일 (2.6)
8	태국 (2.6)	영국 (2.4)	호주 (1.9)	호주 (1.8)	베트남 (1.8)
9	호주 (2.2)	호주 (2.1)	영국 (1.9)	베트남 (1.7)	호주 (1.8)
10	필리핀 (1.5)	베트남 (1.6)	베트남 (1.7)	싱가포르 (1.7)	영국 (1.8)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7

라. 선진화된 식품검사를 위해서는 관능검사¹⁾ 비율을 높여야..

□ 수입식품을 검사하는 방법에는 서류검사, 관능검사, 정밀검사와 무작위표본 검사 등 4종류가 있음. 이중 서류검사가 전체 검사실적의 약 70% 내외로 가장 비중이 높고, 관능검사가 2003년 7%에서 2006년 10%로 증가 하였으며, 무작위표본검사는 5% 내외, 정밀검사 비율은 15%~16%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1) 관능검사란 '사람이 측정기구(5감을 감지)가 되어 식품이나 물질의 특성을 평가하는 방법임'

- 최근, 수입식품 안전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서류검사비율을 70% 이하로 낮췄으며, 1998년에 처음 시작한 무작위표본검사의 표본추출비율을 최고로 상향조정하여 정밀검사가 면제된 제품에 대해서도 무작위 검사를 실시하는 등 검사의 강도를 높여나가고 있는 추세임.

• • 검사종류별 수입식품 검사실적 • •

단위: 건, %

구 분	합 계	서류검사		관능검사		정밀검사		무작위표본검사	
		총량	점유비	총량	점유비	총량	점유비	총량	점유비
2003	185,142	139,492	75.3	13,393	7.2	29,018	15.7	3,239	1.7
2004	196,932	128,288	65.1	29,902	15.2	34,492	17.5	4,250	2.2
2005	215,363	146,036	67.8	29,385	13.6	34,209	15.9	5,733	2.7
2006	238,539	165,007	69.2	24,010	10.1	38,057	15.9	11,465	4.8
2007.6	134,036	90,317	27.4	13,096	9.8	21,898	16.3	8,725	6.5

주 : 점유비는 각년도 총량을 100으로 한 검사방법별 점유비율임.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7, 안명옥의원 재정리

• • 검사종류별 수입식품 검사실적 증가 현황 • •

단위: 건, %

구분	합계		서류검사		관능검사		정밀검사		무작위표본검사	
	총량	증가비	총량	증가비	총량	증가비	총량	증가비	총량	증가비
2003	185,142	-	139,492	-	13,393	-	29,018	-	3,239	-
2004	196,932	6.4	128,288	-8.0	29,902	123.2	34,492	18.9	4,250	31.2
2005	215,363	16.3	146,036	4.7	29,385	119.4	34,209	17.9	5,733	77.0
2006	239,539	29.4	165,007	18.3	24,010	79.3	38,057	31.1	11,465	254.0
2007.6	134,036	-27.7	90,317	-35.3	13,096	2.2	21,898	-24.6	8,725	169.4

주 : 증감비는 1995년을 기준으로 함.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7, 안명옥의원 재정리

- 관능검사는 2004년 이후 점차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서류검사보다는 관능검사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수입식품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란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2. 부적합 수입식품 검사 및 현황

가. 수입식품에 대한 철저한 검사체계 마련돼야..

- 수입식품 검사 결과 적합 내지 부적합 판정을 하고 이는 수입식품판매업자에게 통보됨. 적합 판정을 받은 물품은 관련 절차를 거쳐 국내 시장에 유통되어 국내 생산식품과 동일하게 판매관리 되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은 국내 유통이 불허됨. 이들 부적합 제품들의 사후 처리는 수입판매업자의 당초 계약 조건에 따라 반송, 폐기, 사료용으로 전환 등의 조치를 받게 됨.
-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이 많아지면 결국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므로 좋은 제품을 수입하여 부적합 처분 비율이 낮아지는 게 바람직하겠지만, 검사 부실에 따른 부적합 비율 감소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
- 지난 5여년 동안 우리나라는 수입량 증가와 더불어 매년 수입식품 검사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부적합 비율은 미미하나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부적합 비율 감소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함. 즉, 우수한 식품들이 많이 수입되어서인지 아니면 검사가 부실해서인지를 명확히 밝혀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함.

나. 국제 통상마찰을 고려한 관능검사와 무작위검사비율 늘려야..

- 부적합 판정 전체 상황을 보면 2003년 995건에서 2006년 922건으로 미미하나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수입식품의 안전성이 제고되어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인지 원인이 분석되어야 할 것임.

- 검사종류별 부적합률은 보면 정밀검사의 부적합률이 단연 높게 나타나고 있음. 관능검사 부적합률도 서류검사 부적합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반면에 서류검사의 부적합률은 5.7%~2.6%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부적합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검사방법 순서로는 정밀검사, 무작위표본검사, 관능검사, 그리고 서류검사의 순임을 알 수 있음. 전 세계적으로 수입식품 검사를 강화하는 추세이지만, 한편으로는 국제 통상마찰을 고려해 정밀검사 비율을 무조건 상향조정할 수 없는 실정임. 우리나라도 관능검사와 무작위표본검사 비율을 품목별로 조정하는 가운데 검사 강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 • 검사종류별 부적합 현황 • •

단위: 건, %

구분	합계	서류검사		관능검사		정밀검사		무작위표본검사	
		총량	점유비	총량	점유비	총량	점유비	총량	점유비
2003	995	57	5.7	52	5.2	803	80.7	83	8.3
2004	966	38	3.9	69	7.1	802	83.0	57	5.9
2005	948	24	2.5	47	5.0	824	86.9	53	5.6
2006	922	24	2.6	40	4.4	748	81.1	110	11.9
2007.6	677	18	2.6	31	4.6	511	75.5	117	17.3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7, 안명옥의원 재정리

다. 건강기능식품 부적합 비율 급증에 따른 대책 마련돼야..

- 2003년 현황을 보면 가공식품이 전체 부적합 건수의 86.5%를 차지하였는데 2006년에는 전체의 70.3%로 낮아진 반면, 농·임·축·수산물은 2006년 말 현재 6.5%로 2003년 4.8%에 비해 증가하였음. 식품첨가물과 기구 및 용기·포장류가 감소하고 있는 한편, 수입역사가 가장 짧은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2003년 2.1%에서 2006년 18.4%로 전체 부적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향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 품목별 부적합 현황 ● ●

단위: 건, %

구분	총계	농임축수산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총량	점유비	총량	점유비	총량	점유비	총량	점유비	총량	점유비
2003	995	48	4.8	861	86.5	32	3.2	33	3.3	21	2.1
2004	966	56	5.8	614	63.6	30	3.1	26	2.7	240	24.8
2005	948	85	9.0	576	60.8	34	3.6	30	3.2	223	23.5
2006	922	60	6.5	648	70.3	22	2.4	22	2.4	170	18.4
2007.6	677	40	5.9	532	78.6	14	2.1	14	2.1	77	11.3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7, 안명옥의원 재정리

□ 2003년 대비 각 품목의 연도별 부적합 증감 비율을 분석하면,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07년 들어 증가세에 있음. 품목별 2003년 대비 2006년도 부적합 비율을 보면 농·임·축·수산물과 건강기능식품만이 각각 25%포인트, 709%포인트가 증가 하였으며 반면, 가공식품은 24.7%포인트, 식품첨가물은 31.2%포인트, 기구 및 용기포장은 33.3%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 품목별 부적합 증감 현황 ● ●

단위: 건, %

구 분	전체		농임축수산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총량	증감비	총량	증감비	총량	증감비	총량	증감비	총량	증감비	총량	증감비
2003	995	-	48	-	861	-	32	-	33	-	21	-
2004	966	-2.9	56	16.7	614	-28.7	30	-6.2	26	-21.2	240	1,042.9
2005	948	-4.7	85	77.1	576	-33.1	34	6.3	30	-8.1	223	961.9
2006	922	-7.3	60	25.0	648	-24.7	22	-31.2	22	-33.3	170	709.5
2007.6	677	-32.0	40	-16.7	532	-38.2	14	-56.2	14	-57.6	77	266.7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7, 안명옥의원 재정리

- 매년 가공식품의 부적합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순위는 거의 농·임·축·수산물이었으나 2004년부터는 건강기능식품이 2순위를 차지하면서 농·임·축·수산물은 3위로 한 단계 하향되었음.
- 기구 및 용기포장류와 식품첨가물도 각각 순위가 낮아져 2007.6월에는 식품첨가물이 부적합 처분을 가장 덜 받은 품목으로 분류됨. 이와 같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봄.

• • 품목 대분류별 부적합 현황 • •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2003	가공식품	농임축수산물	기구 및 용기포장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2004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기구 및 용기포장	농임축수산물	식품첨가물
2005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농임축수산물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2006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농임축수산물	기구 및 용기포장	식품첨가물
2007.6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농임축수산물	기구 및 용기포장	식품첨가물

주 : 부적합 건수기준임.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7, 안명옥의원 재정리

- 각 연도별로 부적합 처분을 가장 많이 받은 10대 품목을 보면 2007년 6월 현재 기타가공식품이 2006년에 이어 1순위로 나타났고, 해를 거듭할수록 식품의 수입경향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 증가와 함께 영양 및 건강 증진과 관련된 기능성 식품이 많이 수입되고 있음. 그러나 건강기능식품의 특성상 일반 식품에 비해 선별판단에 전문적인 지식이 더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일반 수입판매업자가 준비없이 수입하는 바람에 부적합률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봄. 또한 절대 수입량이 증가하다보니 부적합률도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음.

● ● 품목 중분류별 부적합 현황 ● ●

순위	2003	2004	2005	2006	2007.6
1	빙과류	기타가공품	영양보충용 제품	기타가공품	기타가공품
2	기타가공품	고추냉이 가공품, 겨자류가공품이 외의 향신료조제품	기타가공품	복합영양보충용제 품	수산물가공품
3	영양보충용 식품	소스류	수산물가공품	수산물가공품	과실류채소소류 가공품
4	소스류	과실류채소류가 공품	캔디류	축산물가공품	과 · 채가공품
5	기타 빵 및 떡류/ 당류가공품	과실주	빵 또는 떡류	과실주	향신료조제품
6	당면(건면류)/과 실류채소류가공 품	혼합음료	과실주	과 · 채가공품	복합영양보충용 제품
7	젤리(캔디류)	사탕류/칼슘보충 용제품	에이코사펜타엔산 (EPA)및/또는도 코사헥사엔산(DH A) 함유제품	소스류	과실주
8	어묵	식염절임	절임류	스피루리나제품	소스류
9	수산물 가공품	EPA 및 DHA 함유 제품	식육가공품	당류가공품	빵
10	혼합음료	기타 빵 및 떡류	기구류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7, 안명옥의원 재정리

라. 국가별 부적합 순위, 중국 40% · 미국 12% 나란히 1 · 2위..

□ 수입 국가별 부적합 순위를 보면 2003년 이후 중국, 미국, 일본 순으로 부적합 처분건수가 많음. 물론 이들 국가의 부적합 비율이 높은 이유는 식품 교역 절대량이 타국에 비해 많기 때문임. 부적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입국을 대상으로 국가차원의 관리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함. 특히 수출입업자에 대한 정도관리, 해외 부적합 식품에 대한 정보수집 강화 등 특별대책이 필요함.

• • 국가별 부적합 순위 • •

(단위: %)

순 위	2003	2004	2005	2006	2007.6
1	중국 (33.9)	중국 (32.5)	중국 (33.8)	중국 (41.3)	중국 (43.3)
2	미국 (19.0)	미국 (19.8)	미국 (17.9)	미국 (16.5)	미국 (12.4)
3	일본 (6.6)	일본 (6.1)	일본 (7.1)	일본 (5.6)	일본 (6.2)
4	태국 (6.1)	태국 (4.3)	캐나다 (5.5)	태국 (3.1)	캐나다 (4.3)
5	캐나다 (4.2)	프랑스 (3.2)	태국 (3.9)	이탈리아 (3.0)	필리핀 (3.8)
6	이탈리아 (2.6)	호주 (3.0)	베트남 (3.1)	독일 (2.7)	프랑스 (3.8)
7	호주 (2.3)	베트남 (2.7)	프랑스 (3.0)	프랑스 (2.6)	베트남 (3.8)
8	독일 (2.3)	캐나다 (2.6)	호주 (2.2)	필리핀 (2.5)	태국 (2.5)
9	프랑스 (2.3)	인도네시아 (2.3)	대만 (2.1)	캐나다 (2.4)	이탈리아 (2.2)
10	인디아 (2.3)	뉴질랜드 (2.2)	필리핀 (1.9)	북한 (2.1)	호주 (1.6)

주 : 부적합건수 기준임.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7, 안명옥의원 재정리

3. 부적합 식품 국내 수입사례(자료보강)

가. 이산화황의 검역기준 20배 초과한 중국산 황게 대량 유통

- 인천의 한 수입업체(00통상)는 2007년 4월 13일과 5월 7일 두 차례에 걸쳐 중국산 절단 냉동게(황게) 14,550박스(104,760kg)를 수입 한 바 있음.
- 유통중인 물량에 대해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성분 분석한 결과 이산화황이 허용기준치(0.03g/kg) 17배가 넘는 0.521g/kg이 검출돼 행정처분 명령과 함께 회수조치 명령이 내려졌음. 하지만, 제대로 회수되지 않아 전체 물량의 6.67%만 회수되고 이미 국내시장에서 유통·소비 됨.

• • 중국산 황게 회수실적 • •

제품명	수입일자	수입량(kg)	회수일자	회수량(kg)	회수율
냉동 절단게	2007.4.10	55,080	2007.6.12	0	0%
냉동 절단게	2007.5.4	49,680	2007.5.23	6,984	14.06%
합		104,760	-	6,984	6.67%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6., 안명희의원 재정리

- 이산화황은 몸속에서 산으로 바뀌어 다량으로 섭취할 경우 인후염, 위염, 위궤양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일부 천식환자에게는 소량만 섭취하여도 호흡 곤란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음. 이산화황이 표백제, 산화방지제 및 보존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이긴 하지만 기준치를 초과한 이산화황은 각종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만큼 엄격한 관리가 필요함.

- 최초의 수산물 수입검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이루어지며, 일단 국내로 유입된 수산물(식품전체)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정기/수시 검사를 통해 식품관리를 하고 있음.
- 더욱이, 이번 사례와 관련해 수입 수산물 검역 책임 관청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검역결과를 내놓은 상태임. 국내 검역기준에 심각한 허점이 있음을 보여주는 심각한 사례임.

• • 중국산 황게 최초 검역결과 • •

접수번호 (접수일자)	업체명 (대표자)	품 명	수입내역		품질관리원 검사결과	검사지원
			수량(box)	중량(kg)		
2007-007499 (2007.4.13)	00통상 (박00)	냉동게 (절단)	7,650	55,080	적 합	인 천
2007-000183 (2007.5.7)	00통상 (박00)	냉동게 (절단)	6,900	49,680	적 합	평 택

※ 자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2007.6., 안명옥의원 재정리

- 회수하지 못한 약 10ton의 중국산 냉동 절단게 중 일부는 이미 시중에 유통되어 국민 식안전을 위협하고, 국민보건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돼 행정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 및 처벌체계 확립이 요망됨.

나. 수입식품 이산화황 올해 들어 검출 증가

- 중국산 전쌀에서 다량의 이산화황이 검출돼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등 수입식품의 이산화황 관리대책이 시급함.

-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수입식품 이산화황 검사현황」에 따르면 2004년 -2007년 상반기까지 수입식품 중 이산화황이 검출된 부적합 건수가 2004년 56건, 2005년 71건, 2006년 53건으로 감소하다가 2007년 상반기에 47건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 수입식품 부적합 현황 중 이산화황 부적합 건수 및 비율 ● ●

연도	전체 부적합 건수	이산화황 부적합 건수	비율(%)
2004	955	56	5.86
2005	953	71	7.45
2006	922	53	5.75
2007.6	677	47	6.94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7

- 품목별로 부적합건수를 보면 2006년의 경우 당귀와 도라지가 8건과 6건으로 최다 부적합을 보인 반면, 올해는 가공식품인 식염절임과 당면에서 각각 9건과, 8건으로 제일 많이 문제가 됨.

● ● 연도별 이산화황 부적합 상위 2개 품목 및 최대검출량 ● ●

	2004	2005	2006	2007.6
1	당절임(6건), 0.43g/kg	황기(13건), 0.43g/kg	당귀(8건), 0.73g/kg	식염절임(9건), 0.25g/kg
2	황금(6건), 1.44g/kg	표고버섯(13건), 0.2g/kg	도라지(6건), 2.67g/kg	당면(8건), 0.16g/kg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7, 안명옥의원 재정리

주1) 검출기준 : 0.03g/kg(단, 식염절임과 당면은 불검출)

- 보약이나 몸을 보호하기 위한 식품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황기, 당귀, 등에서 이산화황 검출 비율이 높았음. 2006년 수입된 당귀의 경우 0.03g/kg 기준의 24배가 넘는 0.73g/kg이 검출되었으며, 2005년 수입된 황기의 경우도 0.03g/kg 기준에 14배가 넘는 0.43g/kg이 검출된 바 있음.
- 또한, 도라지, 표고버섯 등 차례상에 오르는 식품에서도 이산화황이 다량으로 검출되고 있었음. 2006년도 수입된 도라지의 경우 0.03g/kg의 기준에 무려 89배나 되는 2.67g/kg이 검출되기도 했음.
- 2007년 들어서는 술안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절임용 가공식품과 가정집에서 많이 먹는 잡채의 원료인 당면에서 이산화황의 검출비중이 높았음. 당면의 경우 ‘불검출’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0.16g/kg이 검출되었음.
- 한편, 이들 이산화황이 검출된 식품을 수출한 국가는 주로 중국, 북한,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였으며, 최근 들어 프랑스, 미국 등 선진 국가들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남.

● ● 이산화황 부적합 상위 5개 국가 ● ●

	2004	2005	2006	2007.6
1	중 국	중 국	중 국	중 국
2	태 국	북 한	북 한	북 한
3	베트남	베트남	태 국	미 국
4	시라아	프랑스	프랑스	베트남
5	필리핀	태 국	미 국	필리핀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7, 안명옥의원 재정리

- 이산화황이 표백제, 산화방지제 및 보존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이긴 하지만 기준치를 초과한 이산화황은 각종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만큼 엄격한 관리가 필요함. 특히 일부 국가에서 수입되는 농산물과 가공식품에 다량의 이산화황이 검출되고, 그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검사와 검역 관리 강화 방안이 뒤따라야 함.

다. 수입농산물 잔류농약 검역기준 새롭게 마련돼야..

- 최근 중국 산둥성 검역국은 칠레산 냉동딸기에서 사망에까지 이르는 맹독 농약인 ‘메타도포스’와 ‘포레이트’가 검출되어 전부 반송시키는 사건²⁾이 있었음.
- 국내에도 칠레산 딸기가 수입되고 있으나, 중국에서 검출된 포레이트의 경우 국내 기준치가 중국보다 낮고 메타미도포스는 정확한 검출량이 확인되지 않아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음.
- 한편, 국내 잔류농약 기준은 국민평균체중과 식품섭취량을 고려해 설정하고 있음.

● ● 잔류농약 기준 설정방법 ● ●

농약 1일 섭취허용량, 국민평균체중, 식품섭취량 고려하여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기준제시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6., 안명희의원 재정리

2) 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문, 위해정보팀-977

- 수입농산물 검역에 있어서도 국내 잔류농약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은 문제임. 가령,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농약이나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농약을 사용하는 국가에서 재배한 농식품이 국내로 유입될 경우, 국내기준만을 근거로 적합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면 안정성 검증이 안 된 외국산 농약에 루이 국민들이 무방비로 노출되는 상황이 오게 됨.
- 국가간 자유무역협정(FTA) 논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수입 농산물에 대한 새로운 검역대책이 필요함.
- 주요 국가의 '잔류농약 기준' 설정 현황을 보면, 각국이 설정 기준이 현격히 다름. 일본과 같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가 있는 반면, 중국과 같이 농약기준이 몇 개 되지 않는 부실한 국가도 있음.

● ● 주유 국가별 잔류농약 기준설정 현황 ● ●

codex	한 국	미 국	E U	일 본	중 국
157종	380종	375종	199종	799종	74종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6

- 지난 3년간(2004년 ~ 2006년) 평균기준으로 미국은 '부적합 식품 국가별 현황'에서 전체 부적합 식품 중 10.2%를 차지해 43.02%인 중국에 이어 전체 교역국 중 두 번째로 부적합 식품이 많은 것은 국가임.
- 교역국가별 검역체계가 다르고 사용이 허용되는 농약종류가 달라 국가별 조건을 감안한 보다 세밀한 검역기준과 절차가 필요함.

□ 시장 개방 확대와 향후 시장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수입 식품
검역시스템 확립이 절실한 상황임.

• • 2004-2006년 부적합 수입식품 현황 • •

(단위 : 건)

위 반 항 목		2004년			2005년			2006년		
		중국	미국	기타	중국	미국	기타	중국	미국	기타
농·임산물	기준규격	-	-	-	-	-	1	-	-	1
	부패변질	4	-	-	6	-	3	2	-	4
	수입신고	1	-	-	1	-	-	-	-	-
	식품첨가물	25	-	3	45	-	12	26	-	7
	잔류농약	19	1	-	13	-	2	17	-	2
	제조일자변경	-	-	-	1	-	-	-	-	-
	허용 외 원료	-	-	-	1	-	1	1	-	-
가공식품	기준규격	34	9	44	17	7	34	30	4	27
	미생물	67	15	92	81	14	89	104	9	61
	보관기준	-	1	-	5	-	2	-	1	2
	부패변질	4	-	3	2	-	-	6	-	4
	수입신고	31	11	42	31	12	87	55	15	67
	식품첨가물	56	27	103	46	29	74	64	25	92
	위해물질함유	2	4	2	12	2	1	14	3	5
	유통기한 경과	6	2	3	-	-	1	1	-	2
	유통기한 변조	1	1	-	-	-	2	-	1	1
	이물검출	-	-	-	13	-	-	15	-	1
	잔류농약	-	-	-	1	-	1	2	-	1
	제조기준	-	-	-	-	-	2	1	1	1
	제조일자 변조	-	2	-	-	-	-	1	-	-
	허용외 원료	3	2	10	1	-	7	2	1	5
	허용외 첨가물	4	7	25	2	1	5	3	1	21
소 계		257 (38.9%)	82 (12.3%)	327 (48.8%)	278 (41.7%)	65 (9.7%)	324 (48.6%)	344 (48.5%)	61 (8.6%)	304 (42.9%)
		666			667			709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4, 안명옥의원 재정리

Ⅱ

FTA 체결(예정) 주요국가의 수입식품 부적합 현황

1. 중국산 수입식품 현황 및 문제점

가. 중국산 수입식품 해마다 증가, 검역체계 개선돼야..

- 중국산 수입식품 물량은 건수, 중량, 금액면에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중국산은 가격 경쟁력과 지리적 접근성의 이점을 최대한 이용해 국내 식탁을 점령해나가고 있는 실정임.

● ● 중국산 수입식품 수입현황 ● ●

연도	국가별수입량			전체 수입식품 중 점유율(%)		
	건수	중량(KG)	금액(\$)	건수	중량	금액
2003	48,172	2,792,982,311	1,639,164,487	26.00	25.12	28.25
2004	58,484	1,677,716,844	1,021,816,063	29.69	14.65	15.71
2005	67,505	3,247,455,662	1,640,668,680	31.33	28.84	21.63
2006	76,985	2,359,885,791	2,236,590,031	32.27	21.02	28.63
2007.6	41,691	1,658,694,435	1,099,792,454	31.10	27.32	26.11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7, 안명옥의원 재정리

- 전체 수입물량 중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증가해 2003년 26%에서 2006년 전체의 32.27%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중국산 수입식품의 품목별 현황을 보면, 농임축수산물과 건강기능식품류는 미미하나마 감소 추세를 보이는 반면, 가공식품류, 식품첨가류, 기구용기포장류는 각각 2007년 6월말 현재까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 ● 품목별 중국산 수입식품 현황 ● ●

연도	계	농임산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건수	점유비	건수	점유비	건수	점유비	건수	점유비	건수	점유비
2003	48,172	16,036	33.29	24,266	50.37	2,023	4.20	5,847	12.14	0	0.00
2004	58,484	17,889	30.59	30,019	51.33	2,674	4.57	7,542	12.90	360	0.62
2005	67,505	18,377	27.22	37,068	54.91	2,874	4.26	8,503	12.60	683	1.01
2006	76,985	18,986	24.66	43,647	56.70	3,675	4.77	10,099	13.12	578	0.75
2007.6	41,691	9,066	21.75	24,139	57.90	2,094	5.02	6,160	14.78	232	0.56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7, 안명옥의원 재정리

나. 중국산 수입식품 부적합건수 4년 사이 6배 증가..

□ 중국산 수입식품의 경우 2003년 대비 2006년에 건수측면에서 약 6배 부적합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전체 수입량이 2003년 2,792,982(ton)에서 2006년 2,359,886(ton)으로 감소한 상황을 감안할 때 부적합 비중은 엄연히 증가하고 있는 것임.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됨.

● ● 중국산 수입식품 부적합 현황 ● ●

연도	수입현황			부적합 현황					
	건수	중량(KG)	금액(\$)	건수	증감비	중량(KG)	증감비	금액(\$)	증감비
2003	48,172	2,792,982,311	1,639,164,487	66	-	28,729	-	345,777	-
2004	58,484	1,677,716,844	1,021,816,063	310	-8.8	2,335,431	-30.8	2,434,019	-15.4
2005	67,505	3,247,455,662	1,640,668,680	327	5.5	2,526,113	8.2	3,196,410	31.3
2006	76,985	2,359,885,791	2,236,590,031	381	16.5	3,564,421	41.1	5,358,345	67.6
2007.6	41,691	1,658,694,435	1,099,792,454	293	-23.1	2,161,305	-39.4	4,898,846	-8.6

주: 증감비는 전년대비를 기준으로 함.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7, 안명옥의원 재정리

다. 중국산 수입식품 부적합 중 가공식품이 제일 많아..

- 품목별 부적합 현황을 살펴보면, 가공식품은 2003년 대비 2006년에 39.3% 포인트 증가함. 건강기능식품도 같은 기간 1400%포인트 증가함.

● ● 품목별 중국산 수입식품 부적합 현황 ● ●

연도	계	농임산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건수	증감비	건수	증감비	건수	증감비	건수	증감비	건수	증감비
2003	340	41	-	269	-	4	-	26	-	0	-
2004	310	49	19.5	210	-21.9	9	125.0	19	-26.9	23	2300.0
2005	327	67	61.2	211	-21.6	12	200.0	23	-11.5	14	1400.0
2006	381	46	12.2	294	9.3	10	150.0	17	-34.6	14	1400.0
2007.6	293	33	-19.5	232	-13.8	4	0	9	-654	15	1500.0

주: 증감비는 2003년도를 기준으로 함.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7, 안명옥의원 재정리

- 5년 연속 가공식품이 가장 많은 가운데 농임산물, 기구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등이 뒤를 잇고 있음. 특히 최근 들어 건강기능식품의 부적합 순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 중국산 품목 대분류별 부적합 현황 ● ●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2003	가공식품	농임산물	기구 및 용기포장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2004	가공식품	농임산물	건강기능식품	기구용기포장	식품첨가물
2005	가공식품	농임산물	기구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2006	가공식품	농임산물	기구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2007.6	가공식품	농임산물	건강기능식품	기구용기포장	식품첨가물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7

- 품목별로 세분화 해보면, 2006년까지 기타가공품이 부적합 1순위로 나타났으며, 반면 2007년 상반기부터는 수산물가공품이 가장 많은 부적합 건수를 보였음. 2순위로는 향신료조제품과 배추김치, 축산물가공품등이 차지했음.

• • 중국산 품목 중분류별 부적합 현황 • •

순위	2003		2004		2005		2006		2007.6	
	품목명	건	품목명	건	품목명	건	품목명	건	품목명	건
1	기타가공품	48	기타가공품	29	기타가공품	28	기타가공품	43	수산물가공품	22
2	당면(건면류)	23	향신료조제품	25	배추김치	18	축산물가공품	26	기타가공품	16
3	향신료조제품	14	식염절임	15	축산물가공품	17	천연향신료	16	축산물가공품	13
4	천연향신료	13	천연향신료	13	기타식육가공품	14	수산물가공품	15	향신료조제품	13
5	곡류가공품	10	어묵	9	황기(단너삼)	13	향신료조제품	14	과·채가공품	12
6	액상추출차	9	사탕류	9	수산물가공품	13	식염절임	13	일반증류주	10
7	식초절임	8	인삼/장뇌삼/ 신선,냉장	8	표고버섯	10	배추김치	13	식염절임	10
8	식염절임	8	과실류채소류 가공품	7	천연향신료	10	과·채가공품	13	과실류채소류 가공품	10
9	사탕류	8	곡류가공품	7	식초절임	10	식초절임	12	당면(건면류)	9
10	떡류	8	황금/ 건조	6	식염절임	9	기타식육가공품	11	천연향신료	8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7

라. 첨가물 사용기준 위반에서 미생물, 기준규격 위반으로..

- 2003년부터 2005년까지 1순위였던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 사례가 2006년도와 2007년 상반기에는 '미생물 기준초과(세균, 대장균 등)'와 '기준규격 위반'으로 1순위가 바뀌었음. 전반적인 부적합 사유 현황도 2003년 14가지에서 2005년 12가지로 줄어들다가 다시 2007년 6월 현재 16가지로 그 종류와 범위가 증가하였음.

● ● 중국산 부적합 식품, 사유별 현황 ●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6
1	첨가물 사용위반	첨가물 사용위반	첨가물 사용위반	미생물(세균)	기준규격 위반
2	미생물(세균)	미생물(세균)	미생물(세균)	첨가물 위반	첨가물 위반
3	기준규격위반	기준규격 위반	기준규격 위반	기준규격 위반	미생물(세균)
4	원재료 미신고	원재료 미신고	원재료 미신고	원재료 미신고	원재료 미신고
5	허용외 첨가물	잔류농약 위반	잔류농약 위반	잔류농약 위반	항생물질 위반
6	잔류농약 위반	부패변질	위해물질 검출	이물검출	허용외 첨가물
7	위해물질 검출	유통기한 경과	이물검출	항생물질 위반	잔류농약 위반
8	허용외 원료	위해물질 검출	부패변질	위해물질 검출	위해물질 검출
9	이물검출	허용외 첨가물	유통기준 위반	성상	부패변질
10	부적합제품 수입	허용외 원료	허용외 첨가물	허용외 첨가물	허용외 원료
11	유통기한 변조	부적합제품 수입	허용외 원료	제조기준 위반	이물 검출
12	부패변질	제조일자 변조	제조일자 변조	유통기한 경과	유통기준 위반
13	유통기한 경과	유통기한 변조	-	제조일자 변조	수입신고 위반
14	제조기준 위반	-	-	-	제조일자 변조
15	-	-	-	-	유통기한 변조
16	-	-	-	-	제조기준 위반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7

- 수입되는 음식이 다양해지고 양이 많아질수록 국민의 식탁을 위협하는 부적합 사유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됨. 검역과정에서 철저한 검사가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하루빨리 선진화된 검사방법을 도입하여 기술적 제한으로 인해 확인하지 못한 부적합 사유에 대해서도 적발하고 규명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2. 미국산 수입식품 현황 및 문제점

가. 미국산 농임산물·건강기능식품 수입 증가세..

- 미국산 수입식품 규모가 만만치 않은 가운데,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인해 미국산 수입식품에 대한 안정성 대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 미국산 수입식품 수입현황 • •

연도	국가별수입량			전체 수입식품 중 점유율(%)		
	건수	중량(KG)	금액(\$)	건수	중량	금액
2003	36,331	3,074,856,927	1,359,781,544	19.61	27.65	23.44
2004	36,426	3,433,326,359	1,866,723,764	18.49	29.97	28.70
2005	37,079	2,653,217,701	1,691,325,961	17.21	23.56	22.29
2006	38,172	2,821,833,453	1,709,606,460	16.00	25.13	21.88
2007.6	21,064	1,364,891,110	823,470,122	15.72	22.48	19.55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7

- 전체 수입물량 중 미국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3년 19.61%에서 2006년 16%로 감소한 상황임. 이는 중국산의 수입식품이 증가에 따른 상대적인 비중 축소로 보임.
- 미국산 수입식품의 품목별 현황을 보면, 가공식품이 제일 많이 수입되고 있는 가운데 그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음. 반면, 농임산물과 건강기능식품은 점차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 품목별 미국산 수입식품 수입현황 • •

연도	계	농임산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건수	점유비	건수	점유비	건수	점유비	건수	점유비	건수	점유비
2003	36,331	5,201	14.32	24,566	67.62	3,428	9.44	3,136	8.63	0	0.00
2004	36,426	5,763	15.82	21,862	60.02	3,397	9.33	2,875	7.89	2,529	6.94
2005	37,079	5,610	15.13	22,419	60.46	3,557	9.59	2,821	7.61	2,672	7.21
2006	38,172	5,977	15.66	22,429	58.76	3,399	8.90	3,190	8.36	3,177	8.32
2007.6	21,064	3,613	17.15	12,428	59.00	1,927	9.15	1,454	6.90	1,642	7.80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7

나. 미국산 수입식품 부적합 건수 해마다 줄고 있어..

□ 미국산 수입식품의 경우 2003년 대비 2006년에 건수측면에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전체 수입량이 2003년 3,074,857(ton)에서 2006년 2,821,833(ton)으로 감소했고, 부적합 사례도 줄어들고 있음.

□ 그러나 수입금액은 오히려 늘고 있고, 한-미FTA를 타결 및 최종 국회비준을 통해 수입량은 앞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임.

• • 미국산 수입식품 부적합 현황 • •

연도	수입현황			부적합 현황					
	건수	중량(KG)	금액(\$)	건수	증감비	중량(KG)	증감비	금액(\$)	증감비
2003	36,331	3,074,856,927	1,359,781,544	190	-	223,395	-	1,218,169	-
2004	36,426	3,433,326,359	1,866,723,764	189	-0.5	131,209	-41.3	2,887,885	137.1
2005	37,079	2,653,217,701	1,691,325,961	169	-10.6	80,269	-38.8	1,215,863	-57.9
2006	38,172	2,821,833,453	1,709,606,460	152	-10.1	218,158	171.8	1,705,874	40.3
2007.6	21,064	1,364,891,110	823,470,122	84	-44.7	168,451	-22.8	550,662	-67.7

주 : 증감비는 전년대비를 기준으로 함.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7

다. 미국산 건강기능식품 부적합 최근들어 급증..

- 품목별 부적합 현황을 살펴보면, 가공식품은 2003년 대비 2006년에 67.7% 포인트 감소하였으며, 반면 농임산물과 기구용기포장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건강기능식품의 부적합비율은 같은 기간 85건이나 증가하였음. 미국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품질검사가 강화돼야 하는 대목임.

• • 품목별 미국산 수입식품 부적합 현황 • •

연도	계	농임산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건수	증감비	건수	증감비	건수	증감비	건수	증감비	건수	증감비
2003	190	0	-	186	-	3	-	1	-	0	-
2004	189	1	100.0	79	-57.5	3	-	3	200.0	103	10300.0
2005	169	0	-	65	-65.1	4	33.3	0	-100.0	100	10000.0
2006	152	0	-	60	-67.7	7	133.3	0	-100.0	85	8500.0
2007.6	84	1	100.0	61	-67.2	1	-66.7	1	-	20	2000.0

주 : 증감비는 2003년도를 기준으로 함.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7

- 2003년 가공식품 부적합 현황이 가장 많은 가운데,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건강기능식품의 수입이 급증하면서 동시에 부적합 건수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보임. 농임산물과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류의 부적합현황은 거의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미국식품에 대한 검역은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으로 집중하여 검역체계가 개선되어야 함을 암시함.

• • 미국산 품목 대분류별 부적합 현황 • •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2003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	농임산물, 건강기능식품	
2004	건강기능식품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		농임산물
2005	건강기능식품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농임산물, 기구용기포장	
2006	건강기능식품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농임산물, 기구용기포장	
2007.6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농임산물,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7, 안명옥의원 재정리

□ 품목별 세부분류를 살펴보면, 2003년부터 2007년 6월까지 영양보충용 식품 등 건강기능식품이 부적합 1순위로 나타난 가운데 가공품류가 그 뒤를 잇고 있음.

• • 미국산 품목 중분류별 부적합 현황 • •

순위	2003		2004		2005		2006		2007.6	
	품목명	건	품목명	건	품목명	건	품목명	건	품목명	건
1	영양보충용 식품	44	칼슘보충용 제제	9	복합영양 보충용제품	21	복합영양 보충용제품	29	복합영양 보충용제품	11
2	기타 빵또는 떡류	14	비타민C보충용제제	8	EPA, DHA 함유제품	11	기타가공품	6	기타가공품	8
3	기타가공품	8	단백질보충용제품	8	카스테라, 크림이외의 빵	8	혼합침출차	5	서류가공품	5
4	인삼칼셀(정)류	7	기타가공품	8	비타민B1 보충용제품	7	과실주스	5	스낵과자류	3
5	화분가공식품	6	EPA 및 DHA 함유제품	7	과실주스	7	인산성분 함유제품	4	과실음료	3
6	혼합음료	6	식이섬유보충용제품	7	음료베이스	6	사탕류	4	소스류	3
7	글루코사민가공식품	6	비타민B6보충용제품	7	과실주	6	비타민C 보충용제품	4	과실류 또는 과채류쥬	3
8	당류가공품	5	복합영양보충용제품	7	비타민B6 보충용제품	6	감마리놀렌산 함유제품	4	맥주	3
9	향미유	4	혼합음료	6	아연 보충용제품	5	단백질 보충용제품	4	곡류가공품	3
10	과실주스	4	영양보충용식품	6	기타가공품	5	글루코사민 함유제품	4	당류가공품	3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7

라. 부적합 사유로는 기준규격 위반, 첨가물 위반이 대부분..

- 미국산 부적합 식품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2003년부터 2007년 6월까지 ‘기준규격 위반’ 사례가 가장 많았음. 2순위는 다소 변화가 있었는데,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세균, 대장균의 초과검출’ 부적합 사례가, 2006년 이후부터는 첨가물 사용위반사례가 많아짐.

• • 미국산 부적합 식품, 사유별 현황 •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6
1	기준규격 위반	기준규격 위반	기준규격 위반	기준규격 위반	기준규격 위반
2	미생물(세균 등)	미생물(세균 등)	미생물(세균 등)	첨가물 사용위반	첨가물 사용위반
3	첨가물 사용위반	첨가물 사용위반	첨가물 사용위반	미생물(세균 등)	미생물(세균 등)
4	허용외 첨가물	원재료 미신고	원재료 미신고	원재료 미신고	원재료 미신고
5	원재료 미신고	허용외 첨가물	위해물질 검출	위해물질 검출	허용외 첨가물
6	위해물질 검출	위해물질 검출	허용외 첨가물	허용외 첨가물	위해물질 검출
7	허용외 식품원료	허용외 식품원료	제조기준 위반	허용외 식품원료	잔류농약 위반
8	표시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	허용외 식품원료	보존및유통기준	항생물질 위반
9	제조기준 위반	부적합제품 재수입	-	유통기한 변조	허용외 식품원료
10	-	유통기한 변조	-	제조기준 위반	-
11	-	잔류농약 위반	-	-	-
12	-	보존및유통기준	-	-	-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7

- 미국산 수입식품에 대한 ‘규격’과 ‘첨가물’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명확히 설정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중점관리가 필요함.

3. 일본산 수입식품 현황 및 문제점

가. 일본산 가공 수입식품 해마다 증가.

- 일본산 수입식품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중국과 더불어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특히, 국내 외식산업에 있어서도 일본 식품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음.

● ● 일본산 식품 수입현황 ● ●

연 도	수입량			전체 수입식품 중 점유율(%)		
	건수	중량(KG)	금액(\$)	건수	중량	금액
2003	27,124	39,827,631	276,190,782	14.64	0.36	4.76
2004	27,423	40,417,932	287,403,543	13.92	0.35	4.42
2005	30,213	42,020,680	417,098,932	14.02	0.37	5.50
2006	34,028	55,003,431	355,116,049	14.27	0.49	4.55
2007.6	18,685	30,618,910	187,821,369	13.94	0.50	4.46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7

- 일본산 식품은 해마다 14%내외의 비교적 높은 수입식품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 중국과 미국에 이어 3번째로 많은 수입량을 보임.
- 일본산 수입식품 품목별 현황을 보면, 전반적으로 가공식품과 식품첨가물이 약 85%~90%를 차지하고 있음. 한편, 미미하나마 가공식품과 농임산물에서만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 식품첨가물과 기구용기포장류, 건강기능식품은 감소세에 있음.

● ● 품목별 일본산 수입식품 현황 ● ●

연 도	계	농임산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건수	점유비	건수	점유비	건수	점유비	건수	점유비	건수	점유비
2003	27,124	26	0.10	12,701	46.83	11,068	40.81	3,329	12.27	0	0.00
2004	27,423	32	0.12	11,918	43.46	11,873	43.30	2,696	9.83	904	3.30
2005	30,213	17	0.06	14,733	48.76	11,765	38.94	2,739	9.07	959	3.17
2006	34,028	23	0.07	17,744	52.15	12,038	35.38	3,335	9.80	888	2.61
2007.6	18,685	16	0.09	10,175	54.46	6,412	34.32	1,655	8.86	427	2.29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7

나. 일본산 부적합 식품, 올해 들어 증가세..

□ 일본산 수입식품 부적합 현황을 보면, 2005년 62건의 부적합 판정에서 2006년 52건으로 16.1%가량 감소하였다가 다시 2007년 상반기에만 42건의 부적합 현황을 보이고 있음. 일본산 식품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앞으로 부적합 판정 건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 일본산 수입식품 부적합 현황 ● ●

연도	수입현황			부적합 현황					
	건수	중량(KG)	금액(\$)	건수	증감비	중량(KG)	증감비	금액(\$)	증감비
2003	27,124	39,827,631	276,190,782	66	-	28,729	-	345,777	-
2004	27,423	40,417,932	287,403,543	58	-12.12	61,104	112.69	1,273,600	268.33
2005	30,213	42,020,680	417,098,932	62	6.90	19,977	-67.31	436,646	-65.72
2006	34,028	55,003,431	355,116,049	52	-16.13	15,221	-23.81	205,436	-52.95
2007.6	18,685	30,618,910	187,821,369	42	-19.23	8,775	-42.35	276,081	34.39

주 : 증감비는 전년대비를 기준으로 함.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7

다. 일본산 가공식품 · 식품첨가물 부적합 증가하고 있어..

- 품목별 부적합 현황을 살펴보면, 가공식품의 경우 2003년 59건에서 2006년 37건으로 급감하던 것이 2007년 상반기 28건을 기록하면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식품첨가물도 2006년 1건에서 2007년 상반기 3건으로 증가하였음. 반면, 농임산물은 최근 5년 동안 단 1건의 부적합도 없어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평가됨.

● ● 품목별 일본산 수입식품 부적합 현황 ● ●

연도	계	농임산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건수	증감비	건수	증감비	건수	증감비	건수	증감비	건수	증감비
2003	66	0	-	59	-	4	-	3	-	0	-
2004	58	0	-	37	-37.29	2	-50.00	1	-66.67	18	1800.00
2005	62	0	-	43	16.22	3	50.00	1	0	15	-16.67
2006	52	0	-	37	-13.95	1	-66.67	1	0	13	-13.33
2007.6	42	0	-	28	-24.32	3	200.00	1	0	10	-23.08

주 : 증감비는 전년대비를 기준으로 함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7

- 5년 연속 가공식품의 부적합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건강기능 식품이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그 뒤를 따르고 있음. 식품첨가물과 기구용기포장, 농임산물의 경우 부적합 사례가 매우 적어 의미를 가지진 못함. 일본산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중점적인 관리가 마련돼야 함.

• • 일본산 품목 대분류별 부적합 현황 • •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2003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	농임산물, 건강기능식품	
2004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	농임산물
2005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	농임산물
2006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		농임산물
2007.6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	농임산물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7, 안명옥의원 재정리

□ 품목별 세부분류를 살펴보면, 수산물 가공품과 기타가공품 부적합 건수가 제일 많은 가운데 2007년 들어서 새롭게 과자류와 사탕류, 발효음료에 대한 부적합 현황이 나타나고 있음. 어린이들이 많이 먹는 과자와 사탕, 발효음료에 대한 일본산 제품의 정도관리가 시급함.

• • 일본산 품목 중분류별 부적합 현황 • •

순위	2003		2004		2005		2006		2007.6	
	품목명	건	품목명	건	품목명	건	품목명	건	품목명	건
1	소스류	8	수산물가공품	7	수산물가공품	8	기타가공품	7	스낵과자류	5
2	영양보충용식품	5	재제소금	3	기타 빵또는 떡류	8	수산물가공품	4	프로테아제(곰팡이)	2
3	수산물가공품	5	단백질보충용제품	3	기타가공품	6	소스류	4	사탕류	2
4	사탕류	3	기타 영·유아식	3	클로렐라제품	5	케이크류	3	미강유	2
5	혼합음료	2	혼합장	2	떡류	4	스피루리나 제품	3	기타발효음료	2
6	혼합유산균이용식품	2	혼합음료	2	캐러멜	3	국수	2	기타가공품	2
7	포도씨유식품	2	혼합유산균이용제품	2	혼합제재	2	어묵	2	화분제품	1
8	재제소금	2	스낵과자류	2	스피루리나 제품	2	과실류, 채소류, 가공품	2	기구류중 폴리프로필렌	1
9	양갱	2	기타가공품	2	스낵과자류	2	기타 빵 또는 떡류	2	국수	1
10	식용건조효모	2	기타발효음료	2	사탕류	2	복합영양보충용제품	2	과·채가공품	1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7

라. 사유별, 기준규격위반과 첨가물 사용기준위반이 가장 많아.

- 부적합 사유별로는 기준규격 위반이 2005년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1순위로 나타남. 그 다음으로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이 가장 많았음. 또한, 세균, 대장균 등 과다초과되는 ‘미생물 기준 위반’도 3순위로 나타남. 식품첨가물 및 세균 등 부적합 사유 상위 항목에 대한 철저한 검사가 이루어져야 함.

• • 일본산 부적합 식품, 사유별 현황 •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6
1	기준규격 위반	기준규격 위반	미생물(대장균 등)	기준규격 위반	기준규격 위반
2	미생물(대장균 등)	첨가물 기준위반	기준규격 위반	첨가물 기준위반	첨가물 기준위반
3	첨가물 기준위반	미생물(대장균 등)	첨가물 기준위반	미생물(대장균 등)	미생물(대장균 등)
4	허용외 식품원료	허용외 식품원료	수입신고 위반	허용외 식품원료	허용외 첨가물
5	허용외 첨가물	수입신고 위반	허용외 첨가물	수입신고 위반	수입신고 위반
6	위해물질 검출	부패변질	보존 및 유통기한	허용외 첨가물	-
7	제조기준 위반	보존 및 유통기한	허용외 식품원료	잔류농약 기준	-
8	-	-	-	위해물질 검출	-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7

-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경우도 기준규격 위반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아울러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많이 먹는 식품에서 ‘첨가물 사용기준 위반’과 ‘미생물 과다 검출’과 같은 부적합 사례가 종종 발생되고 있어 당국의 각별한 관심과 검역절차 개선대책이 요망됨.

4. 프랑스 수입식품 현황 및 문제점

가. 프랑스산 수입식품의 국내 수입식품 점유율 5% 회복..

- 2003년부터 2006년 동안 프랑스 수입식품은 대한 수입규모는 큰 변화가 없었음. 하지만, 2007년 상반기 수입건수를 비교할 때 예년 수입규모의 70%를 이미 웃돌아 올해 들어 프랑스 수입식품이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 프랑스산 식품 수입현황 ● ●

연도	국가별수입량			전체 수입식품 중 점유율(%)		
	건수	중량(KG)	금액(\$)	건수	중량	금액
2003	10,786	40,968,470	125,992,216	5.82	0.37	2.17
2004	10,028	57,091,153	124,264,839	5.09	0.50	1.91
2005	10,259	43,905,554	134,364,872	4.76	0.39	1.77
2006	10,993	41,410,280	140,344,045	4.61	0.37	1.80
2007.6	7,314	24,288,630	92,411,441	5.46	0.40	2.19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7

- 프랑스산 수입식품은 전체 수입식품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4% 내외이지만 건수면에서는 5%를 상회하고 있음. 중국, 미국, 일본에 이은 네 번째의 수입규모를 보이고 있음.
- 현재 한-EU FTA의 협상이 한창 진행중인 점을 감안할 때 FTA 타결 이후의 시장개방 상황을 대비한 검역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프랑스산 수입식품 품목별 현황을 보면, 가공식품이 80% 내외로 월등이 높은 가운데 식품첨가물과 기구용기포장류가 8%~10%로 비슷하게 수입되고 있음. 반면, 건강기능식품과 농임산물의 경우 국내 수입되는 현황은 거의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 ● 품목별 프랑스산 수입식품 현황 ● ●

연도	계	농임산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건수	점유비	건수	점유비	건수	점유비	건수	점유비	건수	점유비
2003	10,786	135	1.25	8,777	81.37	895	8.30	979	9.08	0	0.00
2004	10,028	155	1.55	7,768	77.46	969	9.66	1,100	10.97	36	0.36
2005	10,259	115	1.12	8,097	78.93	973	9.48	1,044	10.18	30	0.29
2006	10,993	120	1.09	8,748	79.58	1,004	9.13	1,095	9.96	26	0.24
2007.6	7,314	52	0.71	6,034	82.50	582	7.96	616	8.42	30	0.41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7

나. 프랑스산 부적합 건수 급증, 이미 작년수준 웃돌아..

- 프랑스산 수입식품 부적합 현황을 보면, 부적합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06년 24건의 부적합 현황을 보였지만, 2007년 상반기 현재 26건으로 예년 수준을 이미 상회하였음. 그 동안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주로 문제가 되었던 식품 부적합 현황이 미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우리 국민들에게 상대적으로 안전한 국가제품으로 인식되어져 왔던 부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요망됨.

• • 프랑스산 수입식품 부적합 현황 • •

연도	수입현황			부적합 현황					
	건수	중량(KG)	금액(\$)	건수	증감비	중량(KG)	증감비	금액(\$)	증감비
2003	10,786	40,968,470	125,992,216	23	-	11,063	-	43,139	-
2004	10,028	57,091,153	124,264,839	31	34.78	34,270	209.77	137,196	218.03
2005	10,259	43,905,554	134,364,872	30	-3.23	37,319	8.90	194,677	41.90
2006	10,993	41,410,280	140,344,045	24	-20.00	30,229	-19.00	127,024	-34.75
2007.6	7,314	24,288,630	92,411,441	26	8.33	11,669	-61.40	70,620	44.40

주 : 증감비는 전년대비를 기준으로 함.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7

다. 프랑스산 가공식품 부적합 건수 급증세..

□ 품목별 부적합 현황을 살펴보면, 가공식품 부적합 건수가 2003년에서 2006년까지 22건 내외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다가, 2007년 상반기에 이미 22건으로 예년수준의 부적합을 보이고 있어 올해는 더욱 급증할 것으로 분석됨. 그 외 식품첨가물과 건강기능 식품의 부적합 현황은 미미하게 적발되고 있음.

□ 반면, 농임산물과 기구용기포장류 부적합 건수는 최근 5년간 적발되지 않았음. 비록 많은 규모가 수입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수입국에 비해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 프랑스산 수입식품 부적합 현황 ● ●

연도	계	농임산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건수	증감비	건수	증감비	건수	증감비	건수	증감비	건수	증감비
2003	23	0	-	22	-	1	-	0	-	0	-
2004	31	0	0	24	9.09	6	500.00	0	0	1	100.00
2005	30	0	0	26	8.33	2	-66.67	0	0	2	100.00
2006	24	0	0	22	-15.38	0	-100.00	0	0	2	0
2007.6	26	0	0	22	0	2	200.00	0	0	2	0

주 : 증감비는 전년대비를 기준으로 함.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7

□ 지난 5년 동안 가공식품이 제일 많은 부적합 현황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식품첨가물과 건강기능식품이 그 뒤를 따르고 있음.

● ● 일본산 품목 대분류별 부적합 현황 ● ●

구 분	1위	2위	3위	4위	5위
2003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농임산물, 기구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2004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농임산물, 기구용기포장	
2005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농임산물, 기구용기포장	
2006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농임산물,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		
2007.6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농임산물, 기구용기포장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7, 안명옥의원 재정리

□ 품목별 세부분류를 보면, 2004년 이후 프랑스에서 많이 수입되고 있는 과실주에서 비교적 많은 부적합 건수를 보이고 있음. 기타 가공품과 당류가공품이 그 다음으로 많았음. 특히 2007년 이후에는 웰빙 식품이 보편화 되면서 프랑스산 유지류(ex, 해바라기유)가 많이 수입되고 있어 그에 따른 부적합 건수도 새롭게 나타나고 있음.

● ● 일본산 품목 중분류별 부적합 현황 ● ●

순위	2003		2004		2005		2006		2007.6	
	품목명	건	품목명	건	품목명	건	품목명	건	품목명	건
1	기타단일 침출차류	4	과실주	8	과실주	11	과실주	12	과실주	6
2	리큐르	2	기타가공품	7	기타식육 가공품	3	당류가공품	3	해바라기유	2
3	두류가공품	2	포도종자 추출물	2	건조당절임 이외의 당절임	3	겨자가공품	3	타르색소 제제	2
4	과·채 가공품	2	카스테라, 크림빵 이외의빵	2	기타가공품	2	유산균음료	2	착향탄산 음료	2
5	당류가공품	2	휘틀베리 색소	1	휘틀베리 색소	1	초콜릿가공 품	1	복합영양 보충용제품	2
6	과실류 채소류 가공품	2	기타식육가 공품	1	겨자가공품	1	과실주스	1	기타빵또는 떡류	2
7	혼합음료	1	당류가공품	1	기타 영·유아식	1	복합영양 보충용제품	1	홍화유	1
8	기타빵 또는 떡류	1	마리골드색 소	1	당근추출 카로틴 함유제품	1	당근추출 카로틴 함유제품	1	당류가공품	1
9	견과류 가공품	1	벌꿀	1	복합영양 보충용제품	1	-	-	기타식육가 공품	1
10	과실류또는 과채류쥬	1	브랜드	1	브랜드	1	-	-	소스류	1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7

라. 프랑스산 식품 부적합 사유 중 수입신고 위반 사례가 많아..

- 프랑스산 수입식품 부적합 사유를 살펴보면, 2005년 이후 1순위로 나타난 것은 '수입신고 위반'임. 수입신고 위반은 주로 원재료를 미신고 한 것으로 국내 검역당국의 프랑스산 수입식품 신고내역과 식품내역이 일치되는 지를 중점 검사할 필요가 있음.

□ 그 외에 ‘기준규격 위반’과 ‘식품첨가물 허용기준 위반’ 사례가 많았음.

● ● 프랑스산 부적합 식품, 사유별 현황 ●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6
1	기준규격 위반	미생물(대장균 등)	수입신고 위반	수입신고 위반	수입신고 위반
2	미생물(대장균 등)	기준규격 위반	첨가물 기준위반	첨가물 기준위반	기준규격 위반
3	허용 외 식품첨가물	수입신고 위반	기준규격 위반	미생물(대장균 등)	첨가물 기준위반
4	첨가물 기준위반	첨가물 기준위반	미생물(대장균 등)	기준규격 위반	미생물(대장균 등)
5	유통기한 경과	허용외 첨가물	허용외 첨가물	-	허용외 첨가물
6	허용외 식품원료	-	제조기준 위반	-	성상
7	-	-	-	-	허용외 식품원료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7

□ 앞서 분석한 중국(1순위, 첨가물 기준 위반), 미국(1순위, 기준규격 위반), 일본(1순위, 기준규격 위반)과는 다르게 프랑스의 경우 1순위로 수입신고 위반 사례가 많았음. 국가별 위반 사유와 품목을 비교한 국가별 검역체계 개선 로드맵(road-map)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봄.



외국의 식품검역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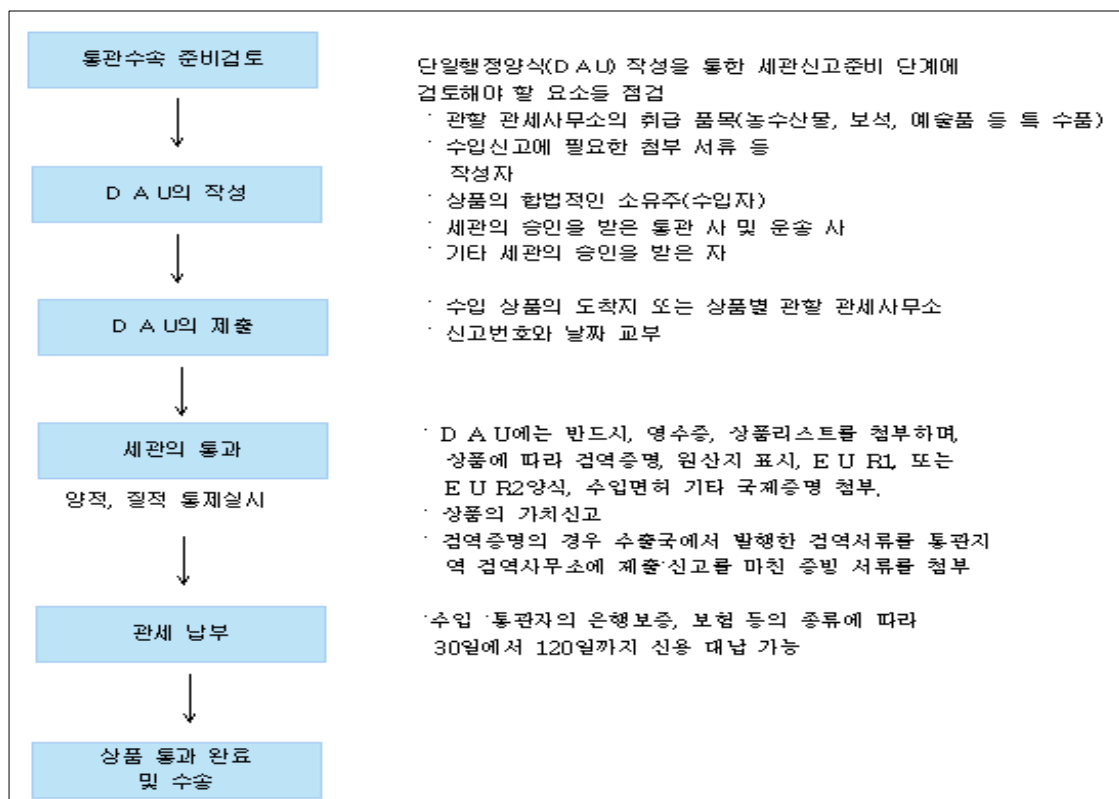
1. 유럽연합의 수입식품 검사현황 및 체계

가. 유럽연합 수입식품 관리제도

- 원산지 규정은 수출국가별 수입상품에 대한 적정관세와 규정을 적용하고 무역통계를 집계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임. 원산지에 따라 적용되는 관세와 규정은 유럽연합과 해당지역 국가들과의 협정 내용에 따라 각각 다를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 유럽연합 관세법 제 23조, 프랑스 관세법 제 34조의 정의에 따른 한 국가가 한 상품에 대해 완전한 원산지 권한을 갖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 해당국에서 채취된 천연재료
 - 해당국에서 수확된 곡물
 - 해당국에서 출생·생육된 동물
 - 해당국에서 생육된 동물로 만든 상품
 - 해당국에서 획득·채집된 수산물과 수렵물
 - 해당국에 등록된 어선이 공해상에서 획득한 수산물
 - 위의 항과 동일하게 해당국에 등록된 선박이 획득한 수산물을 해당국에 등록된 선박
 - 제공 설비를 통해 가공한 생산품
 - 공해상의 심해저에서 획득된 생산품, 이는 해당국가가 특정 해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하였을 경우에 해당
 - 생산공정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 및 폐기물 그리고 생산품 중 더 이상 상하지 않는 것들을 모아 원자재 추출에만 사용되는 것들
 - 위에 언급된 내용과 관련된 상품과 그 부산물

- 유럽연합 규정(Reglement CEE N°802/68)에 의하면, 둘 또는 여러 국가가 개입된 경우 생산된 상품의 원산국가는 최종공정이 이루어지거나, 입증될 수 있는 핵심적인 경제적 가치가 부여된 국가, 그리고 신제품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중요한 생산 공정을 실시한 국가로 규정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함.
- 농수산물과 관련 국가별 또는 국가그룹별로 일부품목(파인애플, 커피쥬, 연초 등)에 대해 관세할당(Contingents Tarifaires), 즉 일정기간 동안 일정 수입량에 대한 관세할인 또는 면제가 적용되며, 여기에 적용되는 국가지역 리스트는 개도국, 후진국, 카리브해 국가, 남미북부지역 국가 등 4개임.

• • 프랑스 수입식품 통관 절차 • •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7

나. SOFI 시스템을 통한 DAU 신고와 통관 수속

- SOFI(Systeme d' Ordinateurs pour le Fret International)라는 명칭의 국제 운송을 위한 정보전산시스템을 통해 통관절차를 간소화·신속화하고 있음.
- 컴퓨터 시스템 화면에 나타난 DUA 양식의 각 란에 해당내용의 코드를(별도코드안내책사) 찾아서 입력한 뒤 접수시키면, 전산망을 통해 해당 납부관세 및 기타 세금 총액이 고지되고 있음.
- 이 전산 시스템에 DUA 입력을 마치면 전산망은 다음 세 가지 형태의 통제결과가 출력됨.
 - CIR 3(녹색) : 신고된 내용만으로 충분함(전체 수입상품의 80%가 해당)
 - CIR 2(오렌지색) : 문서서류에 대한 별도통제 실시가 요구되는 것(예 : 수입 자격 면허)
 - CIR 3(붉은색) : 상품에 대한 직접통제 실시가 요구되는 것으로 세관 요원의 방문이 예상됨
- 그 밖에도 정기적으로 같은 상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체들과 수입통관을 대행하는 전문통관업체들은 세관의 자격 승인을 얻은 뒤 관할 세관과의 계약에 의거해서 사전통관 및 사후신고 등 신속성의 편의를 얻을 수 있음.

다. 수입제한 특혜 대상국

- 프랑스는 유럽연합의 회원국으로 유럽연합 차원에서 주변 국가들과의 농산

물교류 증진과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경제성장 지원을 목적으로 수입물량과 관세제한 완화규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같은 규정은 지역에 따라 그리고 쌍무협정 내용에 따라 특성이 다름.

□ 이들 국가들에 대해서는 세관 수입신고서에 EUR1 또는 EUR2 양식이 사용되며, 지역별, 품목별로 관세면제, 감면, 관세제한 할당(Contingents Tari-faires), 수입물량 규제완화 등의 혜택이 부여되며, 이 같은 결정은 일반특혜관제(GSP) 차원에서 EU가 단독 결정, 해당지역 국가들과 EU의 쌍무협정 그리고 EUD, 내부적인 필요에 근거한 단독결정에 의거함.

□ 유럽연합과 자유무역협회(AELE : Association Europeenne de Lobreechange) : 1973년에 결성된 이 협회 회원국은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리첸슈타인 등으로 유럽연합에 가입을 희망하거나, 또는 국경 인접 국가들로 상호간의 경제활동 편의를 위해 유럽연합 역내와 같은 수준의 자유무역이 실시되고 있음.

□ AELE 국가들은 검역과 식품위생 등과 관련해서 유럽연합과 사실상 같은 규정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자유무역에는 별다른 장애요인은 없음.

□ 유럽연합과 지중해 연안국들은 한 지역의 교역증진을 목적으로 이 지역 국가들과 개별 또는 국가단위로 쌍무협정을 체결하여 상호 관세장벽 제거 또는 부분완화 조치를 취하고 있음.

· Maghreb : 튀니지, 모로코, 알제리 (1973년)

· Machrak :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1977)

· 기타국 : 말타(1970), 이스라엘(1969/75), 키프러스(1972), 터키(1963)

- 유럽연합과 ACP(Afrique, Caraïbe, Pacifique) 69개국간에는 Lome 협정에 의거해서 이들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상품들에 대해 관세와 물량제한의 특혜를 부여하고 있음.

- 그 밖에 유럽연합 가입을 희망하는 발트해 지역 3개국(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과 농산물 교역에 있어 불가피한 상호관계를 갖고 있는 동유럽국가(폴란드, 헝가리, 체코, 루마니아, 불가리아)등에 대해서도 품목에 따라 관세와 수입물량의 제한을 완화하는 협정관계 맺고 있음.

2. 미국의 수입식품 검사현황 및 체계

가. 미국의 검역 체계 개요

- 미국 검역 체계는 동식물 검역과 식품위생관리로 나누어 볼 수 있음. 동식물 검역체계는 농업부(Department of Agriculture) 산하 기관으로 미국의 식물 및 동물 질병예방 기능을 담당하는 동식물 검역국(APHIS,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에서 관리함.
- 식품위생관리는 다시 1) 연방식품, 의약품, 화장품 법(FFDCA,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을 집행하는 식품의약국(FDA)과, 2) 연방 육류 검사법(Federal Meat Inspection Act)에 기초해 가축의 질병검사, 병리학적 조직 검사, 농약 또는 의약품의 잔류검사를 실시하는 농업부 산하의 식품안전검사국(FSIC,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그리고 3) 연방 살충제, 살균제 및 살서제법(FIFRA: Federal Insecticide, Fungicide, and Rodenticide Act)을 기초로 농약 사용을 통제하는 환경보호청(EPA) 등의 업무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또한, 동식물 검역과 식품위생관리는 부분적으로 미국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와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의 행정규칙과도 일부 관련을 가지고 있음.

나. 동식물 검역 및 식품 위생 관리 규정³⁾

- 동식물 검역과 식품위생관리에 관해서는 수많은 법들이 제정되었으며 이들 법의 대부분은 세부 규정으로서 연방 규정집(CFR)에 동식물 검역국 및 식품 안전 검사국이 집중적으로 규칙이 제정되어 있음. FDA와 관련된 규정으로는 21편의 식품의약 편(Title 21 Food and Drugs)에서 주로 규정이 소개되어 있음.
- ‘식품안전검사국’에서는 육류, 가금류, 계란류 제품에 대한 검사의 신청 및 요건(302조), 검사의 개시 및 철회와 위반 보고(305조), 검사시설(307조), 도축 전후 검사(309-310조), 식용 불가능한 육류의 처리 및 폐기(314조), 표시와 라벨에 관한 규정(316-317조), 기록과 등록 및 보고(320조), 연방 육류 검사법 하에서의 처리 규정(335조), 위생(416조), HACCP 시스템(417조), 준비 및 가공(424조), 소비자 보호기준(441조), 계란 제품 검사(590조) 등을 포함한 다양한 규정을 적용함.
- 미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모든 해산물의 80%, 농수산물의 20%, 그리고 그 외의 수만 가지의 관련 제품들이 수입산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수입산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FDA내의 Office of International Program은 수입산 제품을 국내산 제품 규제와 동일한 기준으로 검열하고 있음.
- 수입 식품에 대해 걸쳐야 하는 절차로는 FDA 등록 절차인 Unified Registration and Listing Systems(FURLS)와 사전에 미리 FDA 측에 통보하는 사전통보 시스템(Prior Notice System Interface(PNSI)) 준수를 필요로 하고 있음.

3) 국회도서관 미국 동·식물 검역체계 분석(이만우 조사관), 2007.7

1) FDA 통합 등록 및 리스팅 시스템

- 모든 식품제조업체, 가공업체, 포장업체는 FDA에 등록해야 함. 단, 처음 제조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두 번째 가공이나 포장을 위해 이송된 제품은 마지막으로 가공 및 포장을 담당한 업체가 등록을 해야 함. FDA 등록은 업체당 한번의 등록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며 등록비는 무료임. FDA에는 온라인 등록 방식을 편의상의 이유로 권장하고 있으며 관련 등록 사이트는 www.fda.gov/furls 로서 24시간 365일 운영됨.

2) 사전 통보 시스템

- 식품이 입항하기 이전에 모든 업체는 반드시 FDA에 사전 통보(Prior Notice)를 해야 함. FDA에는 미 국경통관 수비대(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의 자동시스템인 ABI/ACS 을 통해 사전통보를 심사하는 관계로 온라인상으로 접수를 받고 있음. 사전통보는 적어도 입항 8시간 전에 접수 되어야 하며 아무리 빨라도 5일 이전까지는 접수가 불가능함.

3) 식품 반입 절차

- 미 국경통관 수비대로부터 식품이 미국에 입항했다는 통보를 받은 후 FDA에는 수입 서류를 검토하여 식품 검사, 선창가 검사, 표본 검사가 필요한지를 검토해 필요할 경우 식품의 수집된 표본을 해당지역 관할 FDA 시험 분석실에서 조사를 수행함. FDA 표본 분석 결과가 관련법들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면 식품 반입불가가 통보됨. FDA에서는 식품 반입의 허용성을 설명할 수 있도록 수입업자에게 변론 및 증거제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줌.

- 식품 안전 검사국의 육류 및 가금류, 계란류 관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함.

1) 검사 가이드

- 육류 및 가금류 법(Meat and Poultry Acts) 하에서 FSIS는 각 주 사이에서 거래되는 모든 육류와 가금류를 검사함. 이 검사는 이들 제품이 깨끗하고 안전하며 구입 시 인간의 소비에 위생상 좋을 수 있게 보장하는 것임.
- 1996년 FSIS는 병원균 감소/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최종 규정을 제정했음. 이에 따라 연방차원에서 검사된 모든 육류와 가금류 시설은 HACCP 시스템에서 운영되고 새로운 시설들은 검사 허가 이전에 HACCP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함.
- HACCP 최종 규칙은 또한 위생 기준 운영절차(SSOP, Sanitation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의 개발 및 실시도 요구함. 이 프로그램은 제품의 직접 오염이나 불량화(adulteration)를 막고 운영상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것임. 모든 시설은 효과적인 SSOP를 개발, 실시, 유지해야만 함.
- 검사 절차는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시작함. 도축 전 검사는 시각 및 신체적 평가를 통해 질병이 있는지를 판별함. FSIS 검사관은 모든 도물의 도축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수행할 책임이 있음. 도축 후 검사는 몸통과 조직의 건강 상태를 추가로 판별하기 위한 것임. 검사 시스템은 가공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부문에 적용됨.

3) 위험 기반 검사 체계(Risk-Based Inspection System)

- FSIS는 기존의 검사 체계에 더하여 2007년 4월부터 시범적으로 위험기반 검사 체계를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이는 시설의 생산 품목이나 위험 수준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검사가 행해지는 현행 검사 시스템을 보완하려는 것임.
- 모든 시설에 대한 일상적인 검사는 지속적으로 행하면서도, 각 시설이 생산하는 것의 상대적인 위험(제품 속성 위험)과 어떻게 각 시설이 위험을 통제하는가(시설 위험 통제)를 고려하여 FSIS는 가장 자원을 필요로 하는 시설에 검사 자원을 할당하려고 함. 이러한 진보된 검사는 육류, 가금류, 계란 류 제품이 안전하다는 더 큰 확신을 줄 수 있음. 각 부문이 철저히 평가되고 분석되기 때문에 위험 기반 검사는 처리 시설에 중점을 두며 시간을 두고 진행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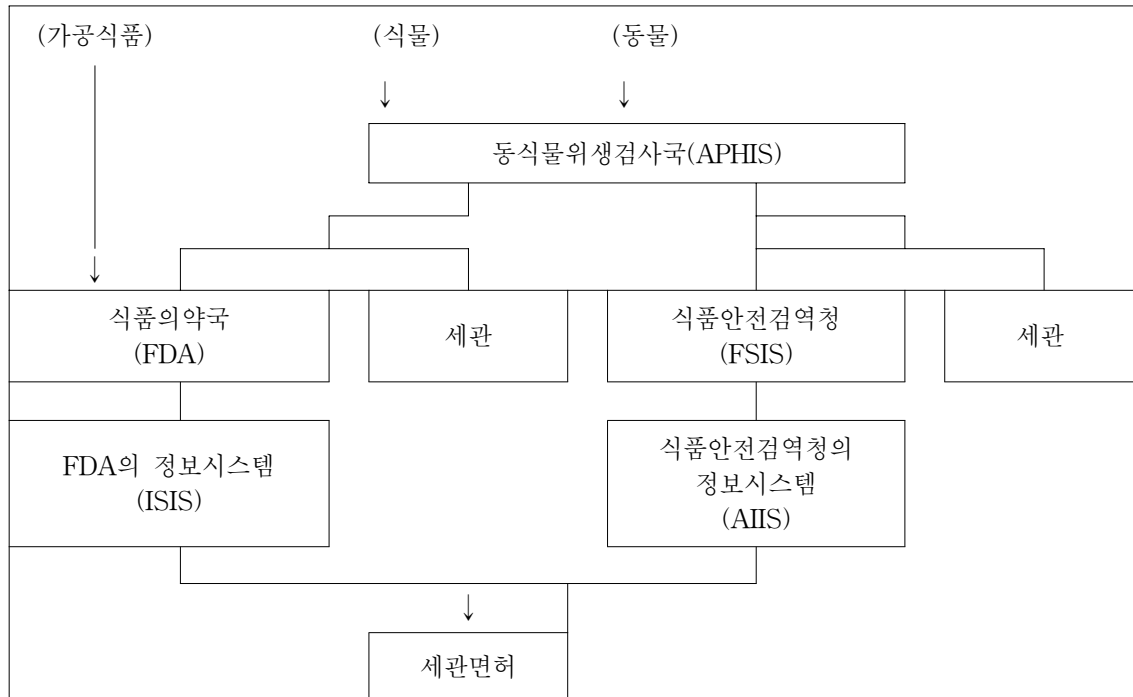
□ HACCP시스템 제정 : HACCP은 1960년대에 우주개발의 일환으로 미국항공우주국(NASA)과 미연방 Natick 연구소, 그리고 우주용 음식의 개발을 위촉받은 Pillsbury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것으로 1971년에 처음으로 그 개요가 발표되었음. 그 후, 1985년에 미국과학아카데미(NAS)의 식품보호위원회가 이 방식의 유효성을 평가하고, 행정당국에 HACCP시스템의 도입을 권고함. 그것을 받아들여 1987년에 미국농무부(USDA), 식품 의약국(FDA) 등의 행정기관 외에 미생물학 및 식품과학관련 전문가를 구성요원으로 하는 '식품의 미생물기준에 관한 자문위원회'가 설치됨. 이 자문위원회에서는 HACCP이 종래의 미생물 제어 방법과 비교할 때, 과학적으로 우수하고 매우 효과적인 관리방식이라고 평가함으로써, HACCP의 법제화를 추진하는

방침이 채택됨. 그리하여 1989년 11월에 'HACCP방식의 원칙' 이라는 가이드라인이 제정됨.

□ **HACCP이란** : HACCP은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의 약자로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임. 즉 위해분석(HA)과 중요 관리점(CCP)의 2개의 작업을 조합시킨 위생관리방식임. 처음에는 식품중의 미생물 제어에 주력하였으나 그 후 검사와 더불어 미생물 이외의 위해인자, 즉 잔류물질을 포함한 전반적인 위해물질의 제어에도 이용 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 종합적인 위생관리기법으로 그 중요도가 높아졌음. HACCP의 장점은 다음과 같음

- 1) 식품의 생산 공정 중 유해한 요소의 발생 위험이 높은 과정에 대한 감독을 중점적으로 할 수 있음.
- 2)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업계가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음.
- 3) 과학적 근거를 기준으로 감독관리를 강화할 수 있음.
- 4) 사고의 발생시 그 원인을 빠르게 규명할 수 있음.
- 5) 위생관리사항을 수시로, 보다 나은 방법으로 채신 할 수 있음.

• • 미국의 수입 동식물 및 식품 검역 검사체계 • •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7

다. 5개의 수입식품의 검사기관

□ 수입식품을 검사하는 기관에는 아래와 같은 기관이 각기 영역에 따라 業務를 수행하고 있음. 이들 기관의 주요업무를 보면 다음과 같음.

1) 식품안전검역청(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FSIS)

- 농무성 산하에 있는 식품안전검역청(FSIS)은 연방정부내에서 가장 큰 검역조직을 구성하고 있음. 식품안전검역청은 미국 내에서 생산, 유통되는 것은 물론, 수출되거나 수입되는 소, 돼지고기 등 육류와 가금류, 계란 등의 검역을 담당하고 있음. 수입되는 품목도 내수용이나 수출용과 마찬가지로

지로 미국이 정하는 기준에 맞추어 미국의 검역관리 하에서 생산되어야만 수입, 판매할 수 있음.

- 식품안전검역청이 실시하고 있는 검역 프로그램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HACCP(The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임. 이제도는 식품 안전성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방식으로서 어떤 식품의 가공공정을 분석한 후 공정에 이상이나 차질이 발생할 경우 유해한 품질의 상품이 나올 수 있는 생산지점을 주요 통제 부분으로 지정, 시스템을 설치, 감시, 조정하고 문제 발생시 이 통제 시스템을 통하여 발생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음. 1995년 5월 “HACCP제도의 식품산업에의 적용을 위한 계획”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여 자율적 사업계획을 발표하였음. 1997년 12월 18일부터는 수입수산물에 대하여 HACCP를 실시하기로 한 바 있음. 주요 관련 법률은 다음 2개임. 1) Federal Meat Inspection Act, 2) Poultry Products Inspection Act

2) 식품의약국(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 보건성의 한 부서인 식품의약국은 미국 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가공품 중에서 육류, 가금류 및 육계류를 제외한 모든 품목의 안전성과 위생관리를 관장하고 있으며 식품의 임의 검역과 시료채취를 토대로 관리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식품 가공품의 농약안전도 수치를 감시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식품의 구성, 품질, 영양, 식용색소 및 안전도와 관련된 기준에 대해 조사 연구하고 개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식품의약국의 검역 및 안전관리를 받는 식품 가공공장, 창고 등은 약 6만여 곳에 달하고 있음.

- 식품의약국은 식품과 의약품 및 화장품에 관한 법령(Food Drug, and Cosmetic Act)에 의하여 이러한 일들을 관리하고 있음.

3) 국립수산청(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s)

- 상무성에 소속된 국립수산청은 수산물에 대해 임의 또는 유료 검역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150여개의 수산가공업체, 중간유통업자, 소매업체 및 요식업계가 동 프로그램에 전적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해마다 400여군의 현장검역이 시행되고 있음. 상무성 또는 연방정부와 주정부로부터 동시에 자격증을 취득한 약 300여명의 검역관들이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검사는 어선과 공장의 위생도, 상품평가, 연구소 분석평가 및 상품의 라벨검사(영양성분표기, 중량,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등으로 실시되며, 특히 상품평가는 내수용, 수출용 및 수입된 수산물 전품목에 대한 검역, 등급화 및 검역보증 등을 포함함. 관련법령은 수산물과 가축에 관한 법령(Fish and Wildlife Act)임.

4) 동·식물 보건검사국(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APHIS)

- 농무성 산하에 있는 기관으로 미국 내 보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충이나 질병에 대처하기 위해 수입 동·식물의 건강상태를 감독하고 수입식품을 검사하고 있음.

5) 관세청(US Customs Service)

- 수입식품의 통관과 관련하여 FDA 및 FSIS의 업무를 수행 지원함.

3. 캐나다의 수입식품 검사현황 및 체계

-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CFIA⁴⁾, EPA⁵⁾를 비롯 알코올 성분 7% 이하의 주류 음료를 제외한 모든 알콜 음료의 안전 관리를 담당하는 주류, 담배 및 총기 관리국 (Bureau of Alcohol, Tobacco and Firearms), 생산 및 수산제품의 안전 관리를 담당하는 국립해양기상청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이 담당하고 있음.

가. 캐나다 수입식품 관리제도

- CFDA가 담당하고 있으며 캐나다 식품의약품(Canadian Food and Drugs Act), 소비자 포장 및 라벨링 법 및 기준 (Consumer Packagine and Labelling Act 및 regulation)에 의거 'Good Importing Practices'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음.
- 캐나다는 이민자로 구성된 국가이기 때문에 국제무역에서 기본적으로 개방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무역장벽이 적은 나라임. 캐나다와 북미무역협정(NAFTA)을 체결하고 있는 미국이 주요 무역 상대국인 관계로 수입통제 및 제한 정책 구사가 조심스럽게 사용되고 있으며 불공정 무역 및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입통제 정책은 관세, 기타 무역 상대국의 덤핑 및 저가정책에 대해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음.

4)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캐나다 검역국

5)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환경 보건국

나. 수입식품 관련 규정

-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모든 식품은 기본적으로 건강과 식품안전 규정 및 라벨링 규정이 포함된 Food and Drugs Act Regulations이 적용됨. 이 법에 의해 독이 있거나 해로운 물질을 함유한 식품, 사람이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식품, 전체나 부분적으로 불결, 부패, 혐오스럽거나 질병에 감염된 동물이나 식물의 물질을 포함한 식품, 변형된 식품, 비위생적 환경에서 제조, 준비, 보존, 포장, 저장된 식품은 판매금지 식품으로 규정함.
- 수입품목, 수출국, 캐나다 수입지역 등에 따라 각종 수입허가나 수출국의 증명서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 정부는 식품 수입 계획에서 캐나다 내 유통까지 식품 수입의 모든 단계에서 당면할 수 있는 문제를 파악하고 통제하는 적절한 식품취급 절차로서 GIP(Good Importing Practices)를 시행하고 있음.

1) 신선 과일 및 채서 수입 관리

- 신선 과일 및 채서, 견과류, 식용 곰팡이(버섯류) 등은 품질, 라벨링, 포장, 등급판정, 식품안전 등의 측면에서 캐나다 농산품법률하의 신선과일·채소 규정, 식품 및 의약품법, 소비자 포장 및 라벨링법을 적용함.

2) 육류 및 육가공품의 수입 관리

- 육류 및 가금육의 수입관련 규정은 'Meat Inspection Act and Regulations' 과 'Export and Import Permits Act'에 의해 규제됨.

- 캐나다로의 육류 수출은 수출국의 육류검역 시스템이 캐나다의 기준과 동일함이 입증된 후 수출을 의도하는 육류 가공공장이 개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 업무는 Canadian Food Inspection System에서 관장함.
- 육류 선적품은 수출국 공인 육류검역기관의 증명서 (Official Meat Inspection Certificate)를 받아야 하며 캐나다 도착 직후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의 검역을 거쳐야 함.
- 식용 육류 수입품에 대한 검역증명서를 받아야 하며, 공인 육류검역 기관의 증명 번호를 포함한 수입검역서류를 소지하여야 함.
- 수입이 허용된 국가의 육류 수입품도 동물 질병 전파방지를 위하여 'Health of Animals Act and Regulations'의 규정을 준수해야 함.
- 모든 육가공품 및 소비자용 포장의 생육은 수입 전 라벨 및 조리법 등록을 마쳐야 하며, 업무는 캐나다 식품검역국의 소비자 포장 및 라벨링법과 식품 및 의약품법에서 수행함.
- 북미무역협정국(미국, 멕시코) 이외의 국가에서 수출되는 신선/가공 가금육 및 냉장/냉동 소고기는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Trade의 수입허가가 필요함.

3) 수산물 수입 관리

- 식품안전, 위생, 라벨표기 등에서 문제가 있는 수산제품의 캐나다 내 반입 금지를 위하여 Import Alert List에 해당하는 수입품과 표본 추출된 수입품들은 Canadian Food and Inspection Agency(CFIA)가 검역을 실시함.

- 검역 기록이 좋은 외국 가공업체는 A-list로 분류되며 수입업체의 요청에 의해 검역빈도가 감소되는데 24개월 동안 30회 이상 수입한 업체에 해당함.
- CFIA는 수산물 수입허가증 보유자에게 5일 안에 검역 결과를 통보하며 CFIA의 동의 없이는 이동이나 판매를 할 수 없음.
- Fish Inspection Regulations, Food and Drug Regulations과 Consumer Packaging and Labelling Regulations에 의해 반입이 거절된 수입품들은 Import Alert List에 포함됨. 반입이 거절된 상품에 대해 수입업자는 재검역을 신청하여야하며, 재검역은 20일 안에 이뤄지며 재검역 비용은 수입업체가 부담함.

나. 수입식품별 검사 기준

- 과일 및 채소 가공품 : 통조림 가공 및 냉동 과일 및 채소, 채소 수프, 카놀라유, 머스타드 가공품, 토마토소스 첨가 스파게티 등의 가공품은 캐나다 농산품법하의 가공상품 규정이 적용됨. 선적 시 마다 '수입신고서 (Import Declaration)' 2부를 구비해야 하며 수입허가는 필요치 않음.
- 곡물 : '95년 8월 1일을 기점으로 밀과 보리 및 밀·보리 제조품은 관세율 쿼타품목(TRQs)으로 지정되었으며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Trade가 발급하는 수입 허가가 필요함.
- 낙농제품 : 국내산 및 수입산 버터, 분유제품, 체다치즈 및 각종치즈 등은 품질표기, 포장, 등급판정, 식품안전 등에 대해 Canada Agricultural Products Act하의 Dairy Products Regulations 적용.

- 모든 낙농제품은 선적시마다 해당 제품이 좋은 원료를 사용하여 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되었으며 선적시를 기준으로 사람의 소비에 적합함을 내용으로 하는 '수입신고서(Import Declaration)' 2부를 구비해야 함.
- 난(卵) 및 난(卵) 가공품 : 난 및 난 가공품은 Canada Agricultural Products Act 하의 Egg Regulations and Processed Egg Regulations와 Food and Drug Act Regulations의 규정을 준수해야 함.
- 검역 프로그램 및 등급표준이 캐나다와 동일한 국가산 제품만 수입할 수 있으며 선적 시 캐나다 표준과 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수출국의 검역서류를 구비해야 하고,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Trade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함.
- 닭 외의 새알 및 가공 오리알은 Egg Regulation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멸종 위기 동식물의 국제무역에 관한 협정 (CITES)' 하에 있는 조류 및 파충류의 알은 원산지국의 수출 허가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Wild Animal and Plant Protection and Regulation of International and Interprovincial Trade Act'법에 의해 캐나다 환경부(Environment Canada)의 수입허가가 필요할 경우도 있음.
- 꿀 : 국내산 및 수입산 꿀과 꿀제품은 Canada Agricultural Products Act 하의 Honey Regulations와 Food and Drugs Act and Regulations을 적용함. 선적 시마다 수입신고서 (Import Declaration) 2부를 구비해야 하며 현존하는 동물 질병으로 전파 위험이 있는 국가의 꿀은 수입을 금지하고 있음.

- 멸종위기 동식물 및 제품 : 환경부가 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품목을 관리하며 멸종위기의 희귀 동식물 수출입시 CITES 품목 해당여부 확인이 필요함. CITES 해당 동식물은 산것과 죽은 것, 부분과 부산물까지 모두 통제 대상으로 수입허가가 필요함
- 식품첨가물 함유식품 : Food and Drug Regulation. Division 16에 식품첨가물의 용도별 분류, 사용식품, 사용량 등을 규정하고 있음. 합성색소는 식품첨가물 중 사용하기 전 반드시 특별허가를 받아야 하는 첨가물로 이에 대한 규정은 'Food and Drug Regulation. Division 6 및 Division 16에서 규정되어 있음.
- 미국 FDA의 허가를 받은 색소는 최근 캐나다에서도 허용이 되며, 새로운 색소 허가문제는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의 Health Protection Branch에서 관장함. 캐나다는 합성 색소에 대해 국제적 공용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명칭에 상응하는 미국 및 유럽식 표기 인정하고 있음.
- 특별 식품 검사식품 대상은 다음과 같음.

1) 시범판매용 식품(Test Market Foods)

- 일반적으로 시범판매용 식품은 이중언어표기 라벨 및 표준화된 용기크기를 제외하고 모든 측면에서 현재의 식품규정 (Consumer Packaging and Labelling Regulations)에 적합해야 함.
- 시범판매용 식품은 그 상태로는 캐나다 내에서 판매된 적이 없는 식품이

어야 하고 성분, 기능, 상태나 포장형태 등의 측면에서 캐나다 내 시판중인 식품과 어떤 식으로든 차이가 있어야 함. 또한 제조업체나 유통업체는 Food and Drug Regulation에 근거하여 임시 매매허용서(Temporary Marketing Authorization Letter)를 발급 받을 수 있음.

- 시범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취급업체에서 실시하기 6주전에 윗부분에 회사명이 인쇄된 편지지에 ‘Notice of Intention to Test Market’ 양식을 작성, 캐나다 식품검역국에 신청해야 하며 포장된 상품에 대한 설명 및 샘플(상품과 라벨 그림으로 대체 가능)을 함께 제출함. 또한 배포 물량, 시범판매 기간(최장12개월), 시범판매 되는 곳의 지명을 표시해야 함.
- 일반적으로 주(province)단위는 광범위한 것으로 간주되며 영어나 불어 외의 언어로 라벨을 표기할 경우, 모든 하부 행정지역이 영어나 불어가 모국어인 인구비율이 10% 이하인 시 단위가 허용범위임.
- 시범판매용 상품이 캐나다에서 판매된 적이 없으며 다른 상품과 차이가 있음을 입증하는 정보 및 보충자료가 필요함.

2) 알레르기 유발식품(Food Allergens)

- 심각한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을 함유한 제품에 대해서는 예방적 라벨표기(예 : ‘May contain peanuts’)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캐나다에서 지정하고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다음과 같음.
 - 땅콩, 참깨, 콩, 밀
 - 견과류 : 아몬드, 브라질 호두, 캐슈, 개암, 마카다미아스(macadamias), 피칸, 잣 피스타치오, 호두 등
 - 우유, 생선
 - 갑각류 : 게, 가재, 바닷가재, 새우 등

- 패류 : 대합, 홍합, 굴, 스캘럽 등
- 아황산염

3) 밀봉용기 포장의 저산성식품(Low Acid Foods)

- 밀봉용기에 포장된 저산성식품(LAFHSC : Low Acid Foods in Hermetically Sealed Containers)은 pH4.6 이상, Water Activity 0.85 이상의 미생물과 공기의 침입을 방지하는 용기에 포장된 식품으로 캔식품, 테트라팩 포장식품이 있음.
- Food and Drug Regulations, Division 27 규정에 의해 밀봉 용기가 팽창한 상태, 부적절하게 밀봉 또는 밀봉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손상된 용기는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밀봉용기의 라벨 또는 용기에는 명료하고 영구적인 방식의 code 또는 lot number를 표기(표기사항 : 상품을 살균한 시설의 번호 및 일/월/연도)해야 함.
- 부적절한 살균 및 용기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담당관의 판단 하에 제조업체나 수입업체에 제조 및 살균포장 과정의 증거자료를 명문으로 요청하고 증거자료가 규정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을 때까지 판매 금지 조치를 취함.

4) 유아식(모유대체식품)

- 유아용 식품의 성분 및 라벨표기 관련 규정은 Food and Drug Regulations, Division 25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판매 전 Health Canada에 'pre-market notification'을 작성하여 통보해야 하여 안전성 평가 및 승인을 받아야 함.

5) 식이요법용 식품

- 체중조절을 포함하여 특별한 식이요법용 식품의 성분 및 포장표기 관련 규정은 Food and Drug Regulations의 Division 24에 해당하며 탄수화물 감소식품, 저염식품, 저칼로리 식품, 액체조제식, 대용식품, 영양보조제, 글루텐 비함유 식품 등이 포함되어있음.

6) 신종식품/유전자변형식품/생명공학식품

- 식품과학 및 생명공학의 발달로 인해 제조된 식품으로 캐나다에서 식품으로 사영된 전례가 없는 제품, 캐나다에서 전례가 없는 제조 과정에 의해 제조된 식품, 식품용이나 식품처리 과정에서 사용된 전례가 없는 미생물을 함유한 식품, 유전자 변형에 의해 전례가 없는 변형된 특성이 있는 식품이나 그와 같이 변형된 특성을 지닌 유기체로 생산한 식품, 기타 가능한 변형식품 등이 포함됨.
- 이 경우 판매 전 Health Canada에 'pre-market notification form'을 작성, 통보하여 안전성 평가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일차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에 모두 해당되며, 이와 같은 식품의 라벨링 문제는 Health Canada와 식품 검역국(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이 공동으로 관장함.

7) 방사선 조사 식품

- 현재 방사선 처리가 허용된 식품은 감자, 양파, 밀, 밀가루, 통밀가루, 향신료 원형 및 간 것, 건조(dehydrated) 조리 조미료 등임.

- Health Canada에 의한 방사선 처리 식품에 대한 특별 라벨링 규정이 적용되며 Food and Drugs Act and Regulations를 준수하지 않은 방사선 처리 식품은 판매가 허용되지 않음.
- 선적 시 방사선 처리식품을 증명하는 'irradiated' 또는 'treated with radiation' 혹은 'treated by irradiation'이라는 표시를 해야 하며 국제적 마크를 요구하지는 않음.

8) 수입규제가 필요한 식품

- 주류, 유제품, 달걀 및 가공달걀, 수산물, 식품색소, 식품첨가물, 다이어트 식품, 신선과일 및 채소, 가공과일 및 채소, 곡류, 꿀, 유아식품, 저산성 캔 식품, 메이플 식품, 육류, novel 식품, 스포츠영양식품, 야생동물 등이 수입규제가 필요한 식품으로 분류함.

IV

수입식품 검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1. 수입식품 검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가. 부처간 조직 및 법의 다원화로 정보 공유 미흡

- 수입식품 등의 검사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11조)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수입식품 등 검사지침)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여러 부처 소관의 독립된 법령 하에 분산 관리하고 있는 실정임. 주요 관련 법령과 세부 내용이 부처별로 분산되어 제시되고 있음.
- 수입식품의 검사체계, 법령이 다원화되어있어 있기 때문에 기관간 사전·사후 정보(현지 및 검사결과 등 안전정보, 현지동향 등)의 공유미흡으로 정책·검사 등 총체적 수입식품 안전관리 기능이 취약한 문제점 있음.
- 또한, 수입식품에 대한 식품안전 문제 발생시 소속기관의 귀책사유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어 능동적 대처가 불가능함. 감시감독 업무수행의 신속성과 일관성이 결여되기 쉬움. 검사 및 유통 과정에 있어 책임이 분산되어 있어 책임 한계에 대한 논란만 가중되어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큼.
- 업무분산은 자원의 집중화를 저해하고, 분산된 개별기관마다 검사장비를 별도로 구비함으로써 국고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음. 특히 시장개방 확산에 따른 국가간 통상문제 발생시 능동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곤란함. 또한 신고기관의 다원화로 국내수출입업자 뿐만 아니라 해외수출입업자의 지속적인 민원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음. 이러한 민원증가는 통상협상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 수입식품 관리 현황 ● ●

부 처	근거법령	신고절차	대상품목
복지부	식품위생법	○식품 등 수입자 → 관할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장(서울, 부산, 경인) 또는 국립검역소장 → 검사(서류, 관능, 정밀) → 신고 수 리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원료성의 농·임· 수산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용 기·포장(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및 국립 수산물검사소 검사대상 제외)
농림부	축산물가공처리 법	○축산물수입자 → 국립수의과학 역원(지원)에 신고 → 검사 (서류, 관능, 정밀검사) → 신고 수 리	모든 수입축산물(식육, 원유, 아이스크 림제품류 중 아이스크림류·아이스크림 분말류·아이스크림믹스류,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조제유류, 식육추출가공품, 우지·돈지)
	인삼산업법	○수입자(수삼, 홍삼, 백삼) → 국립식물검역소 및 식약청 개별 신고 → 검사(식물검역소: 병 충해, 식약청: 농약 등) → 신 고 수 리 → 수입자가 인삼산업 법의 규정에 따른 지정검사 기관의 검사(등급등 신청) → 증지 부착 → 판매	인삼류
해수부	수산물품질관리 법 (식품위생법)	○수산물수입자 → 국립수산물 품질검사의원의 지원에 신고(12개 지 원에서 검사시설 구비) → 검사(서류, 관능, 정밀) → 신고 수 리	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일체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 아 볼 수 있는 정도 로 단순처리한 수산물(활어패류, 신선· 냉장품, 염장품, 어란, 훈제품, 해조류, 건제품, 냉동품)
환경부	먹는물 관리법	○먹는샘물수입자(수입판매업자) →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 청 신고 → 정밀검사 → 신고 수리	먹는물
국세청	주세법	○주류수입자(식품판매업, 주류 판매업) → 지방청신고 → 신고 수 리	주류
산자부	염관리법	○염수입자 → 염업조합신고 → 검토 → 신고수리	식용 및 공업용(사료용 포함) 소금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7

나. 검사기관 일원화 추진돼야..

- 위생검사와 관련해 각각의 정부 부처가 설치하고 있는 검사기관별 근거 법령과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위생검사기관 현황 • •

부 처	근거법령	내 용
식약청	식품위생법	○본청(식품평가부, 식품첨가물평가부) 및 6개 지방청의 시험분석실
농림부	축산물가공처리법	○국립수의과학검역원(5개 지원 중 서울, 부산)
	농산물품질관리법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제주를 제외한 8개 지원)
해수부	수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국립수산물과학원 (8개 연구소 중 남해·양식환경연구소)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12개 지원)
환경부	먹는물관리법	○국립환경연구원 지정 ○4개 지방환경관서
국세청	주세법	○국세청기술연구소
산자부	염관리법	○산자부 품질검사기관 지정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 각 검사기관과 검사기관을 관장하는 부처별 업무 내용을 살펴보면, 식약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에 각각의 시험분석실을 두고 있고, 농림부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5개 지원 중 서울, 부산지원에 각각 검사기관을 두고 있음. 그 외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제주를 제외한 8개 지원이 역시 각각의 시험분석실을 가지고 있음.
- 이처럼 수입식품 검사업무를 포함하여 식품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각 부처는 산하에 필요한 검사기관을 두고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이미 지적된 바와 같이 수입검사업무의 효율성, 책임성, 신속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입장에서의 경영진단을 통해 업무분장 재조정, 나아가서는 기관의 통폐합 방안을 강구해나가야 할 것임.
- 각 기관별 수입검사 업무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식품의약품안전청

- 식품의약품안전청과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위생법’에 근거해 식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기능을 갖고 있고,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함. 즉, 수거검사 결과에 대한 분석·평가 실시, 특별관리대상 식품 및 일상식품에 대한 특별관리 방안 강구, 인체에 유해한 항목의 부적합 판정제품에 대한 철저한 원인 조사, 농산물의 잔류농약 신속수거·검사와 위해 우려가 높은 식품 등의 수거·검사 및 특별기동단속에 따른 선별적인 수거·검사업무 등임.
- 이중 수입식품 통관을 위한 검사업무는 서울, 부산, 경인청의 3개청에 설치되어 있는 수입식품관리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이들 3개 지방청은 수입식품의 정밀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각각의 실험분석센터를 설치하여 정밀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또한 식품의 기준·규격 설정, 식품 등의 표시기준 등 제·개정, 수입식품 검사,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조사처리업 및 건강기능식품업의 허가관리 등 업무도 맡고 있음.

2) 국립 수산물품질관리원

- 국내산 및 수출·입 수산물을 관리하고 있음.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 및 식품안전관리와 관련해서는 중금속, 식중독균 및 항생물질 모니터링 검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음. 부산 등지에 12개 지원을 두고 있으며, 1원과 1연구소를 두고 있음.

3) 국립 수산과학원

- 수산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식품안전 관리 사항으로는 패류 독소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역관리인 적조 등 경보관리를 하고 있음.

4) 국립 수의과학검역원

- 농림부 산하 조직인 국립 수의과학검역원 및 5개 지원은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근거해 식육,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 가공품 등 축산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기능을 가짐. 축산식품의 수거검사 및 부정·불량 축산물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축산식품의 수거검사는 지역별·계절별 성수 축산물의 특성을 고려한 집중수거 검사와 재래시장·영세판매업소 등 유통관리 취약 지역에 대한 중점지도·점검을 하고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마찬가지로 ‘축산물가공처리법’에 근거해 식육 등의 수입품에 관한 검사도 담당하고 있으며, 일반 가공식품과는 달리 식육 전용 보세장치장을 보유하고 있음.

5)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인 시·도 및 시·군·구는 식품 제조·가공업소의 인·허가와 관리, 음식점 영업의 관리 및 수거검사 대상품목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기능을 갖고 있음. 수거검사를 자체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으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같이 수거검사업무를 맡고 있음.
- 월별, 정기 또는 수시 수거검사 실시에 있어 가능한 한 품목별로 중복 내지 누락되지 않도록 수거대상 품목을 적절히 조정배분하고 부적합식품은 시정될 때까지 반복해 수거·검사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고 있음. 한편, 수거검사 등의 이화학적 분석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담당하고 있음. 다만, HACCP 적용업소로 지정된 업소의 HACCP 적용품목은 수거검사를 완화하여 실시하고 있음.

6)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연구기관으로서 수거검사 제품 등의 이화학적 분석·검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식품의 모니터링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다원화된 관리체계 하에 각 기관별 업무분장도 다원화되어있음. 수입식품 등은 관련 부서의 검사기관에서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검사하고 있음. 그러나 식품 등의 위생에 관련된 문제는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국립검역소에서 일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호협력에 의한 수입식품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 수입식품 검사업무 분장 • •

식품위생검사기관	검사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청	문제발생 식품 등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국립검역소에서 검사를 할 수 없는 제품에 한함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검역소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대한 서류, 관능, 정밀, 무작위표본검사
국립수산물검사소	식품위생법령에서 위탁한 수산물에 대하여 식품위생법령에 의거 검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연구소	수입최소량(100Kg) 이하 및 수입자의 요구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 및 국립검역소에서 지정하는 검사항목에 대하여 검사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지방청 및 검역소에서 지정하는 검사항목에 대하여 검사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7

주 : 수입식품을 검사하는 관은 신고를 접수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국립검역소가 있으며 서울, 부산,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자체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외의 국립검역소는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식품위생검사기관에 검사의뢰하고 있음.

□ 이처럼 수입식품 검사조직, 관련 법령, 산하 검사기관 등이 분산되어 있어 그 폐단은 기 지적된 바와 같음.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정부가 일원화 된 새로운 식품안전조직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음. 수입식품 안전관리체계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재조정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봄.

다. 국제관계를 고려한 검사종류의 적정화 이루어져야..

□ 수입식품은 국내에 유통되기 위해서 소정의 통관 검사를 받게 됨.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방법은 서류검사, 관능검사, 정밀검사, 그리고 무작위표본검사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고 있음.

- 수입품의 안전성 제고 차원에서 서류검사보다는 관능검사 비율을 늘리고 있으며, 정밀검사 비율의 증가는 국가간 통상마찰을 초래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정밀검사 대신 무작위표본검사 비율을 높여나가고 있음. 즉, 정밀검사 비대상품목의 안전성을 수시로 점검하기 위한 사실상의 정밀검사 실시 확대라 할 수 있음.
- 서류검사는 통상 2일, 관능검사는 3일, 정밀검사는 10일, 그리고 무작위표본검사는 5일내에 처리토록 되어있음. 규제완화 차원에서 검사기간 단축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나 검사기간 단축을 위해서는 인력, 시설, 예산 등 관련 인프라 확충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 수입식품 검사종류 및 주요 내용 • •

구 분	처리기한	주요내용
서류검사	2일	- 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적·부를 판단 · 자사제품제조용원료 · 재수입신고한 동일사동일식품 등
관능검사	3일	- 제품의 성상, 맛, 냄새, 표시, 포장상태 및 정밀검사 이력 등을 종합하여 적·부를 판단 · 기준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원료성 농·임·수산물
정밀검사	10일	- 식품공전, 식품첨가물공전의 성분규격, 시험방법 등에 의한 물리적, 화학적 및 미생물학적 검사결과에 따라 적·부를 판단 · 최초로 수입하는 식품 등 · 국내외 유해물질 함유 문제제기 식품 등
무작위 표본검사	5일	- 정밀검사 대상이 아닌 식품 중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표본 추출계획에 따라 검체로 선정된 식품 등을 물리적, 화학적,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검사 · 동일사동일식품 등 · 자사제품제조용원료 · 외화획득용식품 등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주 : 다만 통·병조립 식품, 레토르트 식품 등 가온보존시험대상 식품은 14일이며, 동 기간은 경과하여야만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동 기간 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한 것임.

라. 식품 등 수입판매업 관리 소홀..

□ 식품 등 수입판매업에 관련된 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다음과 같음.

• • 식품 등 수입판매업 근거 법령 • •

구 분	현 행
법	제16조 (수입식품 등의 신고 등)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식품 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
	제21조 (시설기준) 다음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가공업·운반업·판매업 및 보존업
	제22조 (영업의 허가 등) 영업의 종류별·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 신고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시행령	제7조 (영업의 종류) 5. 식품소분·판매업 나. 식품판매업 (8) 식품등수입판매업: 식품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다만, 식품 등의 채취·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를 수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3조 (영업신고를 하여야 할 업종) 식품 등 수입판매업
시행규칙	제20조 (업종별 시설기준) [별표 9] 식품 등 수입판매업의 시설기준
	제27조 (영업의 신고 등) [서식 제25호 영업신고서] 각호의 서류 첨부 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영업신고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7

□ 현재 식품 등 수입판매업은 신고제로 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정해진 서식에 의해 접수, 신고토록 되어있으며, 시설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신고수리 후 1월 이내에 실시토록 하고 있음.

- 식품 등 수입판매업(자)과 혼돈되어 현장에 존재하는 업이 수입업무대행업(자)임. 현재 수입업무대행업(자)은 자유업이기 때문에 아무런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대기업의 경우에는 회사 내에 관련 부서가 있지만 중소 수입업자는 대행업자에게 관련 업무를 위임하여 수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며 사람에 따라 두 가지 업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수입식품에 국한된 대행업무만 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임. 점차 식품분야 수입대행업에 관한 국가 관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수입대행업은 신고보다는 인증업종으로 분류하여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기능이 향상되어야 함.
- 최근 중국산 수입품 사고가 다발하면서 식품 등 수입판매업자 관리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삼진아웃제 등을 도입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는 누적적인 관리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 삼진 아웃제의 효과가 미지수임. 블랙리스트에서 탈·편법적으로 빠져나가는 방안들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임.

마. 수입검사 인프라 취약..

- 식품 수입량은 매년 평균 10%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양적 증가에 따른 적정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선 인력 및 장비 등 검사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함. 향후 업무량 증가에 대비해 인력 및 장비의 비용효과 분석을 통한 정확한 추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연도별 수입식품 검사 인력의 증가 현황과 식품관련 예산의 증감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음.

• • 인력 및 예산 증감현황 • •

(단위: 명, 백만원, %)

구 분	인 력		예 산	
	현황	증감비	현 황	증감비
1996	140	0.0	-	-
1997	135	-3.6	-	-
1998	140	0.0	-	-
1999	140	0.0	-	-
2000	136	-2.9	4,684	0.0
2001	140	0.0	4,164	-11.1
2002	139	-0.7	8,202	75.1
2003	142	1.4	12,212	160.7
2004	168	20.0	13,938	197.6
2005	167	19.3	15,913	239.7
2006	363	159.3	23,571	403.2

※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주: 1) 인력현황은 2006년 8월말 기준이며 1996년 대비 증감비율임.

2) 예산현황 2006년 기준이며, 식품관련 분야 예산의 2000년 대비 증감 비율임.

- 검사건수가 년 평균 10% 이상 증가한 반면, 감사인력의 경우는 2000년, 2002년, 2005년도에는 전년 대비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증가한 해도 한자리수 증가에 머물다 2004년에 19.3% 포인트, 2006년에 159.3% 포인트의 획기적인 증가가 이루어졌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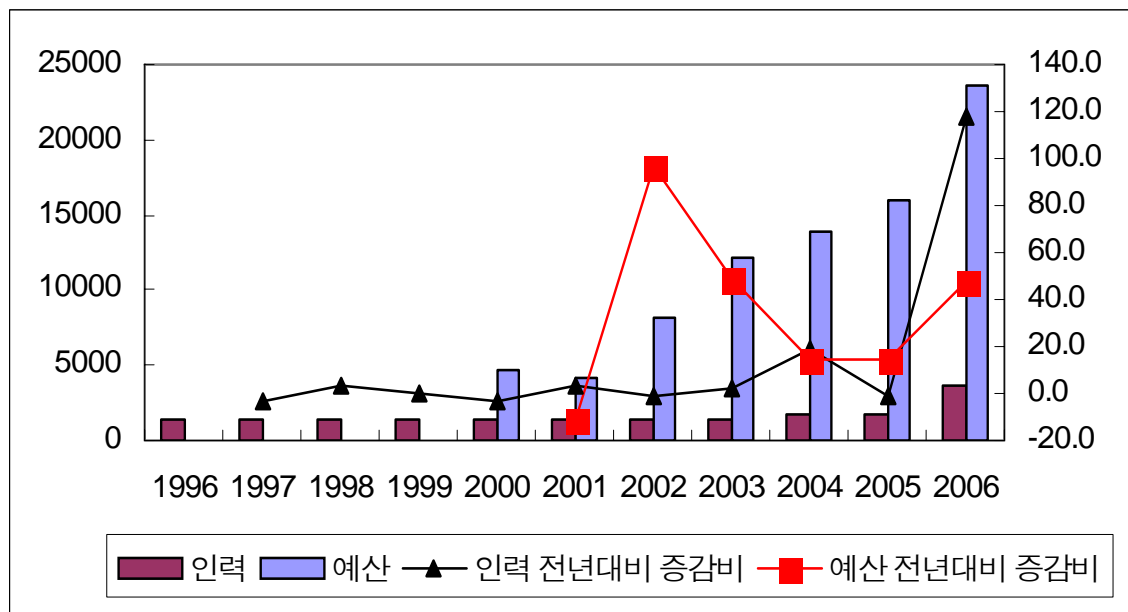
- 2006년의 증가에 의해 1996년 대비 2006년의 수입식품 검사 건수의 증가나 감사인력의 증가 비율은 2배 이상으로 같아졌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증

가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부산청과 경인청에 시험분석센터를 설치함에 따라 각 청에 100명의 인력이 보강된 것으로 서울청과 현장검사인력 측면에서 볼 때는 인력 증가 폭이 다른 해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할 수 있음.

- 예산도 마찬가지로, 증가된 예산의 분배 상태에 관한 심층 연구가 필요하며, 향후에는 이와 같은 특정 연도의 급격한 인력 확충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계획적인 인력 확충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 인력 및 예산 증감현황 • •

(단위: 명, 백만원, %)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주: 1) 인력현황은 2006년 8월말 기준이며 전년대비 증감비율임.

2) 예산현황 2006년 기준이며, 식품관련 분야 예산의 전년대비 증감 비율임.

2. 수입식품 검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 수입식품관리와 관련하여 다원화 되어 있는 부처간 기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조정·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우선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고, 수와 양에서 다양화되고 있는 수입식품의 안전성 제고에 대한 국민의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입 전(前)단계 → 검사단계 → 유통단계로 이어지는 종합적인 안전망 구축이 이루어져야 함.
- 단기적으로는 최근 문제시 되고 있는 식품위해 사고발생시에 대비한 비상조치 계획을 최우선적으로 마련하고, 내분비계교란물질,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신종물질에 대한 기준·규격 설정 및 검사장비를 보강하며, 과학기술발전에 부응한 검사기준·규격의 과학화, 검사관의 파견 등을 통한 해외 정보수집 강화 등을 추진토록 해야 함.
- 중장기적으로는 국외 공인검사기관 지정확대 및 공장등록제 확대 등 수입원산지의 검사 전 감독강화, 유통전산망의 단계적 구축, 국내 민간공인기관 지정확대, 식품전용 보세장치장 지정 등을 추진토록 해야 함. 각 개선방안별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수입식품 안전관리 대책협회의(가칭)’ 구성 절실..

- 수입식품 관련 부처간 업무협력·협의 등을 위한 “식품 안전관리 대책 협회의(가칭)”를 구성하여, 관련부처간 정보공유, 기준선정 등 업무협의, 비상시 공동대처방안 등을 협의·조정토록 함.

-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차관, 식품의약품안전청, 관세청 등 청장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의 주요기능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국무총리훈령으로 명시토록 함⁶⁾.

나. 수입식품 안전성 제고를 위한 기본방향 수립

- 수입식품 안전성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수입식품 검사체계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은 미래지향적인 수입식품 관리체계 구축, 현장중심적인 식품안전으로 패러다임 전환, 그리고 검사 인프라의 효율적 강화라고 할 수 있음.

기 본 방 향⁷⁾

- ☐ 미래지향적인 수입식품 관리체계 구축
- ☐ 현장중심적인 식품안전으로 패러다임 전환
- ☐ 검사 인프라의 효율적 확대

- 기본방향별로 고찰하면 다음과 같음.

1) 미래지향적인 수입식품 관리 체계 구축

- 조직 개편, 법령의 제·개정 등 정부 조치는 정확한 분석과 예측에 근거한 미래지향적 방향성을 가져야 함.

6)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2006, 보건사회연구원

7) 수입검사 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식약청 수입식품팀, 2007.7

- FTA 확산 등 시장개방으로 인한 환경변화, 북한과의 교류확대 등을 비롯한 국내외적 시장환경 변화를 가정한 미래지향적인 식품 안전조직 체계가 확립이 필요함.

2) 현장중심적인 식품안전으로 패러다임 전환

- 중앙차원의 기획 기능에 중심을 두었던 기존의 관행을 탈피하고 현장중심적인 식품안전업무 확대 및 강화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기구 및 인력 재조정, 감시감독체계가 개편이 이루어져야 함.
- 초동대처와 빠른 역학조사 등 현장대응능력이야말로 식품안전 사고 해결을 위한 관건임.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구와의 유기적 협조관계 구축은 현장대응능력 향상의 기반임. 무엇보다 안전성 제고와 식품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한 범국민 감시체계 구축이 필요함.

3) 검사 인프라의 효율적 확대

- 수입식품의 검사량이 증가하면서 적절한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검사 인프라의 확충도 반드시 필요함.
- 업무량이 증가함에 비례하여 인프라의 확충이 초기에는 필요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인프라가 구축되면 그 이후로는 비례적인 인프라 확충은 규모의 경제 차원에서도 필요치 않음. 특히 수입검사 업무의 많은 부분이 민영화되거나 전산화된다면 관련 인프라 확충에 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세부적으로 수립되어야 함.

- 즉, 인프라 확충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효과를 분석하여 전공별 필요인력, 조직, 예산 등 인프라 확충 계획이 계량적으로 수립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임.

다. 수출 전 사전관리 강화돼야..

- 수입물 전량을 검사할 수 없는 실정에서 사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중국 등 문제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의 경우 ‘현지 공장 등록제’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이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의 규정 중 ‘사전확인등록제’에 근거하고 있으나 현재는 등록을 위한 제반 조건이 까다로워 한 곳도 등록된 공장이 없음. 향후 해외 공인검사기관 확대와 더불어 사전적 안전관리를 위한 ‘공장 사전 등록제’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함.
- 공장등록을 위한 기준규격의 재검토 혹은 단계별 완화를 적극 검토해야 함. 대사관 등을 통해 관련 국가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공장, 농장 등 ‘사전등록제’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함으로써 제도의 조기정착을 기하도록 해야 함. 예를 들어 공장등록제에 참여한 업체엔 수입시 최초 정밀검사 면제 등과 같은 인센티브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물론 등록된 공장에 대해선 주기적인 정도관리와 사전 위해요인 점검 활동이 이행되어야 함.

- 정도관리 결과에 의한 업체 등록 갱신, 취소 여부 등도 2년에 1회 정도씩 주기적으로 추진하여 공장등록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함.
- 증가하는 수입품의 사전 안전관리 강화로 수출국의 인프라인 검사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2006년 현재 우리나라가 인정한 해외 공인검시기관은 총 47개소임. 이중 중국에 19개소가 있어 수치상으로는 가장 많음. 이는 2005년 기생충 김치과동을 겪으면서 기생충 검사를 주로 하는 9개소를 중국 내에 선정했기 때문임.
- 공장등록제와 마찬가지로 사후 정도관리가 중요하며, 현재 해외공인검시기관의 성적서가 있는 제품은 최초 정밀검사를 면제해 주고 있음.
- 공장등록제 및 해외 공인검사기관의 확대는 수출국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이라면 국외 식품안전센터(가칭)의 설치에 우리나라의 조직신설에 따른 역할 확대라 하겠음.
- 즉, 수입물량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중국·미국 등지에서 사전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수출과 관련된 중소 수출업체 법적 지도, 인증 부여(정부 위임) 및 실험 대행 업무를 수행토록 하며, 조직의 형태는 한국의 정부 조직보다는 민간형태의 조직 설치가 바람직함.
- 일본은 기 청다오시에 관련 조직을 설치하여 자국내 수입품에 관한 사전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음.

라. 각 검사단계별 중점 관리와 검사가 병행돼야..

- 부적합 처분 결과를 분석한 결과 품목군별로 부적합처분 사유가 다르므로 부적합 처분 사유에 관한 향후 검사 강화와 집중 검사 항목을 선정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 수입산의 경우 5개 품목군으로 분류하여 보면 우선 가공식품의 부적합 처분율이 가장 높아 검사강화 대상 품목군이며, 그 다음은 농수축산물임. 품목별 중점 검사항목은 농수축산물의 경우에는 식품첨가물, 잔류농약, 부패 등에 중점을 두어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가공식품은 미생물(세균수, 대장균, 대장균군), 규격, 보존료 등에 대해 검사를 강화하여야 함.
- 수입식품첨가물은 함량, 순도, 규격을, 기구 및 용기포장류는 중금속, 과망간산칼륨, 증발잔류물 검사를 강화하고, 건강기능식품은 미생물, 규격, 잔류농약에 중점을 두어 검사를 강화하여야 함.

• • 품목별 중점검사 항목 • •

품 목	중점 검사항목
농·임·수·축산물	식품첨가물, 잔류농약, 부패
가공식품	미생물, 규격, 보존료
식품첨가물	함량, 순도, 규격
기구 및 용기 포장류	중금속, 과망간산칼륨, 증발잔류물
건강기능식품	미생물, 규격, 잔류농약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7

마. 수입국 제도를 활용한 관리 강화돼야..

- 중국 정부의 경우 자국의 수출품 관리를 위해 쌀, 소금, 초, 식용유 등 5개 품목에 대해 QS인증 표시제를 채택하여 실시하고 있음. 이와 같이 수출국의 인증 표시제를 적극활용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중국 내 식품안전성이 인증하는 가장 상위표시인 QS표시가 붙은 제품 등에 대해선 국내에 수입될 때 검사와 관련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즉, 서류검사와 관능검사를 받고 통관된 제품을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무작위표본검사의 대상품목에서 제외시켜 주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또한 이 표시를 국내 판매 시에 해당제품에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확인시켜 주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정부 관리 밖에 존재하는 수입대행업자에 대한 정부 관리가 필요함. 수입대행업자는 수입 대행업무뿐만 아니라 직접 수입업무도 하고 있어 수입대행업자를 수입업자로 간주하여 당분간 허가업종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수입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로 삼진 아웃제와 더불어 제품의 검사이력 누적에 따른 차등 대우 조치도 검토가 필요함. 즉, 수입검사 성적에 따라 인센티브와 디스인센티브 방안을 마련, 적용토록 함.

- 서류검사와 관능검사에 의해 통관된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표본을 선정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무작위표본검사 비율이 2006년 현재 전체의 5.0%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이의 상향조정이 필요함.
- 특히 중점검사 항목과 중점검사 품목에 한해서는 반드시 표본검사 대상이 전체의 10% 이상이 되도록 검사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야 함.

바. 인프라 강화를 위한 주기적 · 심층적 검토 필요해..

- 해마다 수입품의 증가에 따른 지속적인 검사인력의 증원이 필요하였는데 결국 2006년 한해에 모두 확충되어 통계상으로는 인력 부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하지만 이처럼 특정 해에 갑작스런 인력 증원은 인력 활용상에도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업무량 증가 등에 근거한 세부적인 인프라 강화 계획이 수립되고, 이에 기초한 인프라 확충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즉, 인프라 강화를 위한 관련 검토가 주기적,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식품검사소의 현장 검사소 내에 실험분소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검사업무를 추진함이 필요함. 식품위생법상 시료채취 후 4시간 이내에 검사토록 하는 규정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 또한, 현장의 실험분소 설치에 2006년 증원된 실험실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실험분석센터에 인력을 재배치하여 각 분야의 검사를 담당하도록 조치가 취해져야 함.

사. 국외제도 이해를 위한 전문인력 집중 양성해야..

- 국외를 대상으로 한 식품수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 사정에 정통한 공무원, 수입업자 등이 필요함. 식약청 내에 언어를 전공한 자의 채용과 식품수입에 관한 업무를 전담시켜 전문성을 키워나가야 함. 필요하다면 관련 인력의 해외연수 기회도 확충해나가야 함.



참 고 문 헌



1. 식품의약품안전청, 『중국산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입식품 검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천녹색소비자 연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2. 최지현, 『식품 안전관리 현황 및 발전방안-식품산업발전방안 세미나 발표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
3. 정세국·정기혜 등, 『경인지역의 수입물량 변화예측 및 검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인천녹색소비자연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4. 정기혜, 윤시몬, 김영래, 김정선, 『식품검사제도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12.
5. 정기혜, 박노성, 김영래, 윤시몬, 『식품안전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8.
6. 정기혜·윤시몬·김영래, 『식품안전관리에 관한 국민의 인지도 및 그 체감도에 따른 행동유형 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12.
7. 최성락, 『식품위생법의 이해』, 2002.
8.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입식품 검사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02.

9. 봉성종 등, 『유통식품의 수거, 검사제도 효율화 방안』,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1.
10. 정기혜,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체계의 현황 및 개선과제』,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11. 정기혜, 백화종, 김정근, 김영래, 『식품안전관리의 효율화, 과학화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12.
12. 국무조정실, 수입식품 정책에 관한 평가, 1999.
13. 정기혜, 강성호, 식품진흥기금의 관리실태 및 운용방안 개선,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14. 정기혜, 김정근, 『수입식품의 안전성 시책 평가 결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12.
15. 정기혜, 『수입식품에 관한 소비자와 판매업체의 인식 및 관리현황』, 『보건사회연구』, 제18권 1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6. 『식품 안전관리의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9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4.

VI

부 록

- 관련 법률 개정안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명옥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234
----------	------

발의연월일 : 2007. 3. 15.

발 의 자 : 안명옥 · 정문헌 · 이성
권배일도 · 박찬숙 · 이
윤성 · 엄호성 · 안상
수 · 이계경 · 최철국
의원(10인)

제안이유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점차 증대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건강기능식품에 의한 피해사례도 점차 커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건강기능식품 부작용을 보고하도록 하여 유사사고의 재발을 막고, 피해구제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여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업자의 준수사항으로서 건강기능식품의 섭취와 관련하여 부작용 등이 발생한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고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제5호 신설).

나.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나 그 수입자로 조직된 단체는 건강기능식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건강기능식품의 섭취와 관련하여 부작용 등이 발생한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고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것

제2장에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건강기능식품 부작용 피해구제 등) ①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나 그 수입자로 조직된 단체는 건강기능식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나 그 수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피해구제 및 연구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영업자의 준수사항) ①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와 유통질서유지 및 국민보건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4. (생략) <u><신설></u> 5. (생략) ② (생략) <u><신설></u>	제10조(영업자의 준수사항) ①----- ----- ----- ----- -----. 1. ~ 4. (현행과 같음) 5. <u>건강기능식품의 섭취와 관련하여 부작용 등이 발생한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고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것</u>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건강기능식품 부작용피해구제 등) ① <u>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나 그 수입자로 조직된 단체는 건강기능식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u> ② <u>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나 그 수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u>

현행	개정안
	<p><u>피해구제 및 연구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u></p> <p><u>③정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u></p> <p><u>④제1항의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p>

食品衛生法 일부개정법률안

(안명옥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399
------------	------

발의연월일 : 2006. 5. 18.

발 의 자 : 안명옥·최경환·정화원
진수희·이강두·이주호
박찬숙·정의화·엄호성
신상진·윤건영·배일도
의원(12인)

제안이유

식품 관련 사고의 빈발과 문제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이력추적관리 제도를 도입하는 추세이고, 농산물의 경우 2005년 8월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을 통해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한 바 있음. 이에 식품의 제조·가공부터 판매까지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식품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때 해당 식품을 추적하여 신속하게 원인규명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식품관리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한편, 일반인에 비해 건강에 취약한 영·유아, 병약자, 노약자, 임산부 등이 영양관리를 위해 즐겨 먹는 특수용도식품은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대상자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 최근 중국에서는 유아용 불량식품으로 신체가 기형적으로 성장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고, 우리나라도 일부 특수용도식품에서 이물질과 대장균이 검출되거나 함량이 미달되는 등 부적합 건수가 증가하

고 있는 실정임.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 증가 등으로 특수용도식품 수요가 급증하고, 유사한 많은 제품이 제조·수입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특수용도식품의 경우 일반식품에 비해 영양 및 품질 등을 더욱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재 특수용도식품은 일반식품과 구분없이 시·군·구에 대한 신고만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제품 품질평가는 물론 불량제품에 의한 위해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어려움. 이에 각 제품의 용도, 영양·생리학적 특성, 유용성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선행될 수 있도록 사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개별 인정제도를 도입하여 특수용도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식품이력추적관리에 관하여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 나. 식품의 영양학적 특성에 따른 유용성 및 용도를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유용성 등의 표시·광고심의기준에 따른 심의를 받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 다.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식품이력추적관리를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당 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등록을 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식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3 신설).
- 라. 유용성 등의 표시·광고심의기준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식품의 영양학적 특성에 따른 유용성 및 용도를 표시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77조제1호).

법률 제 호

食品衛生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7735호 食品衛生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식품이력추적관리”라 함은 식품을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해당 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식품을 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제2항 중 “規格을”을 “규격, 영양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및 그 밖에 국민보건상 필요한 자료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식육의 원산지등”을 “식육의 원산지등 표시, 식품이력추적관리”로 한다.

제4장에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유용성 등의 표시·광고 심의) ①식품의 영양학적 특성에 따른 유용성 및 용도를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유용성 등의 표시·광고심의기준에 따른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3(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 ①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식품이력추적관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당 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는 식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기록의 작성·보관 및 관리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하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식품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그 품목의 특성상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식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⑦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⑧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절차 및 등록사항 그 밖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8조제1항제1호중 “제11조제1항”을 “제11조제1항, 제11조의2”로 한다.

제59조제1항제1호중 “제11조제1항”을 “제11조제1항, 제11조의2”로 한다.

제73조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내지 제7호를 각각 제2호 내지 제8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유용성 등 표시·광고의 심의를 신청한 자

9. 제32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등록을 신청하는 자

제77조제1호 중 “第11條제1항”을 “제11조제1항, 제11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78조제3항 내지 제6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③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1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명옥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398
------------	------

발의연월일 : 2006. 5. 18.

발 의 자 : 안명옥·최경환·정화원
진수화·이강두·이주호
박찬숙·정의화·엄호성
윤건영·배일도 의원
(11인)

제안이유

건강기능식품의 제조·가공부터 판매까지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건강기능식품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때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추적하여 신속하게 원인규명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이는 건강기능식품관리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주요내용

가.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에 관하여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나.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등록을 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라 함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품질”을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로 한다.

제5장에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 ①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는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기록의 작성·보관 및 관리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하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건강기능식품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그 품목의 특성상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⑦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⑧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절차 및 등록사항 그 밖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등록

제47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22조의2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1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u>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u></p> <p>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 5. (생략)</p> <p><u><신설></u></p>	<p><u>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u></p> <p>제3조(정의)</p> <p>-----</p> <p>-----.</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u>”라 함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p>
<p>제18조(허위·과대의 표시·광고 금지) ①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u>품질</u> 등에 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1. ~ 5. (생략)</p> <p>② (생략)</p> <p><u><신설></u></p>	<p>제18조(허위·과대의 표시·광고 금지) ①-----</p> <p>-----</p> <p>-----<u>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u>-----</p> <p>-----.</p> <p>1. ~ 5.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u>제22조의2(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u></p>

현행	개정안
	<p>리 등록기준 등) ①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는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기록의 작성·보관 및 관리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하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건강기능식품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제42조(수수료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신고·신청·검사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p>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그 품목의 특성상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⑥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p> <p>⑦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p> <p>⑧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절차 및 등록사항 그 밖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제42조(수수료 등)

현행	개정안
<p>한다.</p> <p>1. ~ 8. (생략)</p> <p><u><신설></u></p> <p>제47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 <p>1. ~ 7. (생략)</p> <p><u><신설></u></p> <p>8. (생략)</p> <p>② ~ ⑤ (생략)</p>	<p>-----.</p> <p>1. ~ 8. (현행과 같음)</p> <p>9.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u>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등록</u></p> <p>제47조(과태료) ①</p> <p>-----</p> <p>-----.</p> <p>1. ~ 7. (현행과 같음)</p> <p>7의2. 제22조의2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1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p> <p>8. (현행과 같음)</p> <p>② ~ ⑤ (현행과 같음)</p>